

진보진영 평화 대토론회

진보의 ‘한반도평화’ 버전

사회

김세균

(진보교연 상임공동대표)

발제 및 토론자

권영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금 민(사회당 전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조성우(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송주명(진보교연 공동집행위원장)

조덕휘(반빈곤빈민연대 공동대표)

일시 및 장소

2011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주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를!

— 공존 · 공생 · 공영을 위한 제안

|| 민주노동당

I. 천안함 · 연평도 사태의 교훈

◎ 완충장치의 무력화, 신냉전체제 구축

-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가 상존함.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한반도 정세는 냉전으로의 회귀로 규정할 수 있음. 사실상 ‘신냉전 체제’ 구축기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한국의 안보완충 장치들은 대부분 유실되거나 약화됐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서해 5도 평화구역설정 등 핵심적인 남북관계 완충장치들이 무력화 됐음.

◎ 우발충돌에서 의도적 충돌로, 전쟁위기의 가중

- 전쟁불감증이 남북 적대관계 증대로 나타나고 있음. 상시적 적대행위가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오고 있음.
- 지난 서해교전의 경우 우발적 충돌의 성격이 크나, 최근 천안함 · 연평도 사태와 첩보심리전의 경우는 의도적 충돌의 성격이 큼.
-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정전상태에서 국지전 및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기국면에 처해있음.

II. 서해 NLL 동북아의 화약고

◎ NLL 충돌, 미중간 국제전 준비상황으로

- 서해 NLL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은 한반도의 위기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음.
- 지난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벌어진 동북아 위기고조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준비상태로 치달았음.
- 한미일 군사동맹 대 북중러 군사세력의 충돌은 동북아를 급속히 신 냉전체제로 끌고 가고 있음.

◎ NLL 관리의 주도권 강대국의 손으로

- 특히나 연평도 사태 등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보인 태도는 국익과 실리, 명분을 모두 잃은 실패였음.
- 첫째로, 무리한 포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갔음.
- 둘째로, 보수층에 화답하는 내부정치 중심으로 사고함으로써 외교적 실패를 가져왔음.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를 고착화 시킨 것은 두고 두고 한국의 외교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임.
- 셋째로, 북핵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음. 북한이 대화공세로 나오던, 강경책으로 나오던 한국정부는 파탄난 남북관계와 긴장국면을 타개할 수 없는 웅색한 상황에 처해 있음.

◎ NLL을 동북아 화약고에서 평화의 바다로

- 2002년 6월 2차 서해교전 발발 이후 남북간 논의를 거쳐 NLL 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합의와 공감각이 이뤄졌음.
- NLL 평화구역 설정에 실패하면 남북간 안보질서의 주도권은 주변 강대국으로 넘어가며, 평화체제는 멀어지게 됨.
- NLL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바로미터이며, 핵심 사안임.

Ⅲ. 동시성·포괄성 원칙에 입각한 평화체제 구축이 해법

◎ 한반도 평화통일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서

- 한반도의 분단은 그 시작부터가 동북아 군사갈등에서 비롯됐음.
- 분단이 해소되지 않고선 동북아의 평화체제가 만들어 지지 않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은 동북아 구성원 모두의 평화에 대한 굳은 신념에서 시작될 수 있음.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달성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임.

◎ 선후논쟁을 넘어 포괄적 접근 필요

- 진보진영 일각에서 논쟁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의 선후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임.
 - 평화가 곧 통일이며, 통일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걸 인식해야 함. 선평화론 혹은 선통일론 식의 선후 문제가 아님.
 - 첫째로 해야 할 조치는 기존의 합의사항 즉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성명, 10·4 선언 등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함. 또한 북미간에 합의됐던 ‘북미 공동코뮈니케’ 등이 이행되어야 할 것임.
 - 둘째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임. △북핵 및 한반도비핵화지대화 합의 △북미 관계 정상화 및 북미국교수립 △북일 국교수립 등과 함께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 지역안보기구 설립이 필요함.
- 6자 회담의 틀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역안보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셋째, 동북아 지역안보기구는 남북간 평화와 통일을 뒷받침하는 기능.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안보완충지대로 활용되던 기존 질서를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함. 미중일러의 평화세력과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가 필요할 것임.

Ⅳ. 나가며

- 최근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위기 상황에서 한일간에 공감되고 있는 인류애의 가치를 주목해 봐야 할 것임.
- 또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유출 사태 이후 한반도 비핵시대화는 물론 한중일 3국간

의 원자력 안전 공조체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한중일 3국이 가진 교류와 공감의 역사는 동북아 지역 국민들의 유전되고 계승되고 있음.
- 핵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 인류적 가치가 구현되는 동북아 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임.

〈참고자료〉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민족공동체 구성을 향해!

-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악순환 구조 하에서 살아 왔다. 1945년 8.15해방이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해 영토와 민족이 둘로 갈라졌으며, 외국군이 주둔하면서 자주 독립국가 건설의 꿈이 무산되었고,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경험하면서 남과 북 사이에는 적대적 대결구조가 형성되었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악순환구조는 북미관계, 한미관계, 남북관계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으나, 상호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고한 틀로 짜여 그 어느 한축이 붕괴되면 다른 축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기본 축은 북미간의 적대구조이다.¹⁾ 북미 적대구조는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유지를 통해 한미동맹체제와 북 체제와의 적대적 대결구조로 전환되어, 이것이 다시 남북 대결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게 된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민족의 분단을 강제했으며, 남북사이의 대립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급기야는 전쟁 상황까지 몰아갔다. 전쟁이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1) 한국 사회에서 한반도 분단과 전쟁구조에서 기본적 대립축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구별된다. 북미대결구조를 기본 축으로 내세우는 입장에서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없이 한반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 요원하며, 남북의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반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제일의 장애 요인으로 본다. 반면이 한반도 분단과 전쟁구조에서 기본적 대립 축을 남북 대결구조로 내세우는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역시 남북 평화협정 체결로 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분단과 전쟁구조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대립과 대결을 격화시켜왔다.

분단과 전쟁의 악순환구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민주 세력들은 예외 없이 분단과 전쟁구조를 유지 온존하면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지배와 억압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삼았다. 이 땅의 민중들 역시 분단과 전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들의 자주적 권리와 요구를 내세우지 못하고, 반민주세력들의 지배와 억압에 굴종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놓고 볼 때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분단과 전쟁의 악순환구조는 민중생존권과 복지를 중시하기보다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경제체제를 선택하도록 영향을 줌으로서 수십년동안 민중의 생존권과 복지가 희생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각 나라와 민족단위로 전개되어 왔던 경제활동이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 전자혁명 등으로 인해 생산과 무역활동에서 전통적 국경의 한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연적 추세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생산과 무역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펼쳐지면서도 여전히 나라와 민족이 경제활동의 기본단위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나라와 민족들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펼쳐지는 무한경쟁체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경쟁력이 각 민족과 민중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중요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분단경제체제는 이러한 현대 경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불합리하며, 우리 민족의 총체적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서 21세기에 당당한 나라와 민족으로서 우뚝 서는데 매우 큰 걸림돌로 될 것이다. 따라서 분단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통일 민족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분단과 전쟁구조를 하루빨리 끝내고 평화와 통일구조를 확립해야 할 절박성은 바로 이로부터 나온다.

1. 민주노동당의 평화구상

1)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평화를 보장하는 통일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있어 왔다. 통일 없는 평화체제, 평화없는 통일체제가 그것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평화운동에 집착하는 오류를 보였다. 또 다른 진영에서는 통일이 되면 평화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통일지상주의적 주장을 펴오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운동의 당면 목표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 중심고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이 없다면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 지난 해 연평도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안정적인 분단관리는 존재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이나 평화정착이냐의 선택지만 존재한다. 남북관계의 평화정착은 곧 남북관계 발전을 의미하며 이는 곧 통일체제의 수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체제와 통일체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쌍두마차이다.

한반도 통일운동이 당면 목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며, 그 중심고리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없다면 남북관계 발전 역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북미적대관계와 한미동맹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파탄났던 것처럼,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노력이 전개되었지만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과 조건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상호 밀접한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현실에서 평화가 곧 통일이며, 통일은 평화라는 원리를 기본원리로 삼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이어야 하며, 한반도 통일체제는 평화체제에 기초한 통일체제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체제가 구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평화 통일체제가 될 수 있다.

2)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구조는 정전체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전이란 말 그대로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전의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체제는 곧 전쟁체제이며, 기술적으로 볼 때 전쟁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에서 전쟁 상황을 종결하지 못한 채 60년 가깝게 전쟁 상태가 지속된 사례는 없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는 매우 민감하며

중요하다. 남북 당사자론과 남북 평화협정 체결론은 법적 측면에서나 현실적 측면에서나 불합리하다.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에 나설 자격이 없다. 현실적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군은 한반도 전쟁과 평화문제에 대해 결정권이 전혀 없다. 아무런 실권을 갖지 못한 자가 협상의 당사자로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실에서 보아도 현재 정전협정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유엔사이며, 유엔사의 실질적인 권한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상의 주 당사자는 북미양자일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측면과 원칙적 측면에서 볼 때 북미평화협정 체결론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군을 배제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근거는 사라지며 그에 따라 한미군사동맹체제도 해체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군사동맹이 해체되게 되면 정전체제의 남측에서는 한국정부와 군대가 평화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통해 구성될 평화체제 구축과 유지 관리 문제를 담당할 한국군을 배제시키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북미양자와 한국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참여 문제는 고려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될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한반도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사자로서의 현실적 자격 요건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북중 동맹 역시 해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적 쟁점은 주한미군 철군 문제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평화체제론이 진보진영 내에서도 대두되는 현실이다. 국제정치 역학 상 한미동맹 해체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형성된 것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은 곧 한미동맹의 존속 이유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은 논리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이 전략적 유연성 즉 다른 분쟁지역으로 신속히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주둔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내적 평화만이 아니라 외적 평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감안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100%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의 이유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여하한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연방제 방식의 통일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적 자주권과 단결 단합의 실현, 즉 자주와 단합의 문제이다.

세계화 시대에 당당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민족적 역량을 총결집, 총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 사이에서 존재하는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분열을 극복해 단결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남북 대결에 민족적 역량을 낭비하고서야 어떻게 세계화 시대에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21세기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더욱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전 지구촌적 범위에서 펼쳐지는 경쟁에서 나라와 민족의 역량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민족적 역량의 극대화는 필수적 요구로 되고 있다. 전 민족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단결하고 단합해야 하며, 그것은 오해와 불신, 적대와 대결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화해와 단합의 통일체제로 나아가 가능해진다.

수십년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에 살고 있었고,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뿌리 깊게 깔려 있는 남북관계에서 분단을 넘어 통일의 시대로 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체제 통일론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양 체제와 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체제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체제 통일론을 추구할 경우 상대방 체제와 제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키고, 대립과 대결을 격화시켜, 궁극적으로 적대와 증오의 분단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평화적 방법이 아닌 폭력적 방식으로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평화와 통일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전 민족적 요구와 지향,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다. 평화 없는 통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6.15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 사이에 공통점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연방제와 연합제가 같은 것은 아니다. 두 방안의 공통점은 서로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통일의 초기 단계에 외교주권과 군사주권을 남북 양측이 공히 동등하게 행사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외교주권과 군사주권을 남북 양측이 행사하는 것은 과도기의 형태일 뿐이다. 항구적으로 남과 북이 외교주권과 군사주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의 지속이다. 영구분단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하에서 확인되었듯이 분단의 지속은 대결을 양산하며 대결은 곧 군사적 충돌로 귀결된다. 결국 연합제 방식의 통일은 군사적 충돌과 분단 대결의 격화를 그 자체로 내재하고 있는 개념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추진하자는 것은 완결된 통일 체제를 일순간에 건설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통일체제 구축의 전 단계 작업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적 실체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 과도적 형태의 남북 단결 단합 체제를 먼저 구축하자는 것이고, 거기에서 출발해 국가적 실체성 뛰어넘는 통일 체제를 모색해 보자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며, 평화적 방식의 통일 방안은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외에는 없다.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다. 양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 기초위에서 양 체제와 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이기 때문에 남북 모두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고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평화적 통일 방식이기 때문에 남북 양측의 기존의 힘과 역량을 소진시키거나 허비하지 않고 그것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뿐 아니라 남북이 통합함으로써 남북 양측의 힘과 역량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플러스 효과가 발생해 우리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대원칙을 망라하고 있다.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천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이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고수해야 할 민족대단결 강령이며, 통일강령이다.

일각에서는 6.15 공동선언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용론을 제기하는 세력들은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말고 다른 원칙이 있는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방안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가.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공동선언 무용론은 기실 남북관계 발전 무용론이며, 평화통일 거부론에 불과하다.

10.4 선언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 지향적으로 내부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은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을 제시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분쟁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불가침의무를 재확인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군사보장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혹은 4자 정상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바꾸기 위한 모든 실천적 강령을 포괄하는 문서를 60년이 넘는 분단사에서 최초로 합의한 것이 바로 10.4 선언이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 정신을 갖고 10.4 선언을 이행하기만 한다면 남과 북의 대결구도는 해소되고 평화와 협력의 구도를 형성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5) 동북아 평화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서 초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동맹관계를 해소하거나 재정립하는 것이다. 냉전시기 한미일 해양동맹과 북중러 대륙동맹의 대결구도였던 것이 탈냉전을 거치면서 북중러 대륙동맹이 이완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북중러 삼각 관계는 대륙동맹과 유사한 성격으로 다시 복원되었다. 한미일 해양동맹은 비록 일본 민주당의 집권 이후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문제는 동맹 그 자체라기보다는 동맹의 구체적 행태에 있다. 비근한 사례가 미사일 방어체제이다. 미사일 방어체제는 북중러 대륙동맹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제는 대륙동맹과 해양동맹이라는 냉전적 대결구도를 재생산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북아 체제 내에서의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같은 동맹 관계내에서 행해지는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초점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분쟁의 요소들이다. 동북아시아 내에는 역사 분

쟁, 영토 분쟁이 첨예하게 자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같은 분쟁은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분쟁들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은 더욱 크다.

동북아시아 내에서 존재하는 동맹 갈등과 역사적 분쟁을 청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갈등의 두 축을 해결할 가능성을 형성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은 ‘북미 적대적 관계’의 청산을 의미한다. 한편 ‘북미 적대적 관계’ 해소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미일 동맹의 형성 조건의 하나가 소멸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미일 동맹 역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이 한미일 동맹이 변화한다면 그 상대역으로 존재했던 북중러 대륙동맹의 변화가 수반된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개국의 협력이 고도의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6개국의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역사적 분쟁은 현재적 신뢰 구축 앞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6자회담 내에서 동북아평화구축은 하나의 실무그룹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의 가속도로 역사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과정은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도 결정적으로 이바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연동되지 않는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로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당면 과제

당면한 한반도 긴장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한반도 평화를 논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당면한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는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이다. 지난 해 연평도 사건은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화두로 올려놓았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는 당면한 한반도 평화 실현의 최우선적 과제이다.

1) 남북 정상회담으로 천안함을 우회하라

지난 해 연평도 사건은 결국 천안함의 결과였다. 그러나 천안함은 여전히 미해결상태이며 미제사건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단서가 없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결정적 단서도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천안함을 우회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남는 것은 대결과 군사적 충돌 밖에 없다.

천안함을 우회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선차적인 과제는 긴장완화에 있으며 긴장완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서 천안함이 존재한다. 천안함 사과를 고집하면서 긴장격화로 갈 것인가 천안함을 우회하면서 긴장완화로 갈 것인가. 보수건 진보건 답은 분명하다. 긴장완화를 위해 모든 것을 제껴두어야 한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2) 북미 양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2010년 2차 북미 양자회담이 추진되다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멈추었다.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고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으로 북미 양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북미양자대화는 남북관계 진전과 병행되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한반도적 구조임을 감안하면 북미양자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남북 사이의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화도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모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북미 양자회담은 6자회담으로 이어지고 다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격화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문제임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

|| 진보신당

I. 머리말 : 평화 문제에 대한 입장 천명의 주요 기초

○ 이명박 정부 비판을 넘어 진보진영의 평화 정책 필요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가 크게 후퇴한 것은 분명. 그렇다고 진보진영이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 비판에 머물거나,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로 귀결되는 주장과 행동에 그칠 수 없음. 이른바 햇볕정책 10년의 과정에서도 군비는 오히려 급속히 증강됨. 게다가 한미동맹의 변환 수용, 분쟁지역으로의 파병 등의 문제도 있었는데, 평화의 원칙을 견지하지도 현실화시키지도 못한 과거 정부의 정책이 진보의 대안일 수는 없음.
- 지체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아시아에 신 냉전적 대립구도가 형성될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 대안의 제시 필요.

○ 평화와 관련한 이슈 발생 시 원칙의 견지와 적극 대처

-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및 지역 차원의 평화의 위기 도래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원칙의 공유가 필요.
- 평화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연평도 사태 직후의 상황에서 보듯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님. 그럴수록 힘을 통한 억지가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 달성이라는 대 원칙을 확인하고 이후 이것을 고수할 필요.
- 북한이 이런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할 때도 북한에 대한 비판은 유보되어야 한다, 혹은 침묵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의 경우, 민주노동당 분당 이전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발생했고,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핵실험과 연평도 도발 및 이후 추가 충돌 등의 상황 시, 즉 정당의 발언과 행위가 가장 주목받을 때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임. 이는 정당과 정치세력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자는 우리의 주장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떨어뜨릴 것임.

○ 평화는 복지의 전제 조건?, 군축을 통한 평화와 복지의 행복한 만남!

- “평화 없으면 복지 없다”는 주장은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의미일 수 있음. 그러나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과연 무슨 복지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²⁾라는 주장은 역으로 현재와 같은 북과의 긴장 상태에서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우파의 담론에 이용당할 수도 있음. 평화와 복지라는 양대 과제가 행복하게 결합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군축’ 등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활동이 필요.

II. 진보신당 제안 진보 진영의 평화안

-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안 필요
 - 연평도 포격과 대응 훈련 강행 등 국지적 충돌이 있었고, 그 재연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식 있는 세력이라면 누구나 견지할 원칙일 것임. 그러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방지를 최우선으로 놓자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국제정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타산과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
 -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목표의 달성이 지체 및 퇴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국지적 충돌 및 미·중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화를 통한 일괄타결 및 지역 차원의 대안적 질서의 창출이라는 큰 줄기의 원칙과 해법은 이미 있으나, 지금까지 왜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성과는 부족한가 하는 성찰적 시각에 입각해 우라늄 농축 등 새로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더불어 현재 핵심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복지와 평화의 관계에 대한 명철한 인식

2)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복지정책과 실행방안,” 연석회의,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pp.4-6. 특히 p.5.

과 대안 필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의 대안: '신 일괄타결안'

○ 진보신당의 '신 일괄타결안'

- 6자회담 복귀와 중단된 사항의 이행 : IAEA사찰단 복귀와 대북 제재 해제
-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논의 : 농축우라늄의 경우, 그 연료봉의 한국 구매, 러시아 등에 이전. 북에 200만 kw의 에너지 공급의 건은 러시아 천연가스 이용 화력발전소 건설 및 한국 주도하(일본 등이 참여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및 장비 등 지원 시작
- 2012년 경, 핵무기의 러시아 이전·폐기 시작과 평화협정 서명 이전의 최종 완료 단계에서 협정 비준과 북미 수교, 북일 수교

표-1. 한반도 비핵화 · 평화체제 달성의 신 일괄타결 이행표

| 시기 당사국 | | 2011 상반기 | 2011 하반기 | 2012 | 2013 ~ |
|------------------|---------------|--------------------------|---|--|--|
| 비 핵 화 | 북 한 | 핵 활동 동결 선언 | IAEA 사찰단 복귀 (우라늄 농축 등 사찰) | · NPT체제 복귀 · 핵 연료봉 외국 이전 · 핵무기 이전(· 폐기) 시작 | 핵무기 폐기 |
| | 한 국 | | · 금강산·개성 관광 재 개 * 남북 정상회담 | · 정상회담 합의 경험 이행 · 핵 연료봉 구매 | 한(·일 양)국 '핵우산' 의존정책 철폐 |
| | 5개 국 공통 |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재개 | · 대북 제재 해제 · 중유 100만톤 선적 완료 · 에너지 등 경제지원 방안 구체화 | · 천연가스 발전소 공 사 착수 · 러시아 천연가스관 공사 착수 · 재생 가능 에너지 체 계 지원 시작 | · 철도 연결 지원 · 북에 대한 대대적 개 발 지원 착수 |
| | 6자 공통 | 6자회담 복귀 | 신 일괄타결안 합의 | 동북아비핵지대 논의 | 동북아비핵지대 서명 |
| 평 화 체 제 | 남 북 한 | | 선 군비동결 선언과 정상회담에서의 군축 선언 | · 남북 군축 이행 구체 적 방안 논의· 합의 · 북의 '미사일 모라토 리움' 선언 | 군축 이행 |
| | 6자 공통 | 상호 위협적 행위의 중단 | 별도 포럼에서 평화협 정 등 논의 시작 | · 3·4자 정상회담과 평 화협정 서명 · 동북아평화포럼 사무 국 출범 | · 평화협정 비준 · 지역 주둔 미군의 점 진적 철수 |
| | | | 미국, 일본의 북한과의 수교 협상 | | 미국, 일본의 북한과 의 수교 |

－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일괄타결할 시점과 조건을 분명히

- 현황 : 19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북미 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에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일괄타결은 수시로 난관에 봉착했었고, 6자회담은 2년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음. 이 와중에 우라늄 농축 등 북의 핵능력은 계속 증강.
- 출구(최종 해결의 시점과 조건)를 명확히 : 출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주고받기는 중간 단계에서 검증 등의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중단되거나 역진될 가능성 있음.

현재와 같은 대화 부재, 비핵화의 지체 및 위기 상황은 정권교체 등의 외부적 변수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최종 단계에서 행하기로 한,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이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에서 행해질지에 대해 모호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됨. 즉 입구뿐만 아니라, 완전 해결의 출구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조속 타결 추구** :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과연 이런 일괄타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분위기가 강함. 그러나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의 대선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그만큼 약해지고, 중국에 기대는 정책을 지속하려는 생각이 강해질 것임.

2012년 강성대국 선포의 해와 “인민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겠다.”는 김정일주의의 정권이양은 불안요소일 수도 있으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일괄타결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강할 수 있음. 이 시기를 그냥 넘어가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 정도에 북·미·중이 타협하고, 핵의 완전 폐기와 평화체제는 요원의 과제로 남을 수도 있음.

- 북한에 경수로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 체계 등 공급

- **요지** : ‘평화적 핵 이용론’에 입각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말고 지속가능성과 첨단성을 겸비한 재생 가능 에너지 체계 등의 공급을 모색해야.
- **핵의 평화적 이용?** : 9.19 공동성명에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북한도 핵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함.

그러나 일본 동북 지방의 대지진과 지진해일에 따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재앙이 보여주듯이 경수로 등 핵 발전은 결코 첨단의 대안 에너지라고 할 수 없으며 참혹한 핵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

- **대안** : 대규모 송전 시설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소규모의 재생 가능 에너지 체계를 북한의 여러 지역에 건설할 수 있을 것임. 재생 가능 에너지가 북한이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200만 kw 정도의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

그 상당 부분은 CO₂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 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러시아 천연가스의 도입은 한국의 에너지 확보 필요성에서도 검토되고 있으므로 그 일부를 이용하면 될 것임.

- ◎ **‘우라늄 농축’** 건 : 농축 우라늄은 평화적으로 이용된다고 할지라도 경수로 등 원자력발전에 이용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북한의 주장처럼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한반도비핵화 선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일괄타결에 오히려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음.

6자회담을 통해 해결책을 논하되,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 등을 통해 밝힌 플루토늄 연료봉의 해외 판매·이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판매·이전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듯함. 플루토늄 연료봉의 경우 한국이 그것을 이용할 시설이 없다는 점, 농축 우라늄 연료봉의 경우 한국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의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 이전하기보다 한국이 구매하되 러시아 등에 재판매·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진영 간 갈등으로부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로

: 한반도 문제와 별개의 과제거나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실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와 그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보듯 한반도 평화와 긴밀히 결합된 문제이며, 한반도 차원의 새로운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도 진영 간 대결이 굳어지기 전에 ‘동아시아 평화·공영공동체’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필요.

○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형성

- 2011년 1월의 미·중 정상회담으로 신냉전의 우려는 상당 정도 불식됨. 그러나 G2 시대 미·중 관계가 기본적으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 문제는 갈등의 측면이 강화될 때 한미동맹 유지와 한중관계의 긴밀화는 병행하기 힘든 딜레마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비핵화나 평화체제 형성, 통일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 기본적으로 양호한 미·중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의 알파요, 오메가일 수는 없지만, 그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형성이 한국의 대외전략일 수 없다는 것은 보수도 대체로 동의. 왜?
 - G2로 성장하는 중국: 세계 2위의 총 GDP와 국방비, 외환보유액 2조 8473억\$ 등
 - 중국과의 경제관계 심화
 -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EU(11.5%), 미국(10.7%), 일본(6.1%)을 모두 합한 것에 육박

표-2. 한국의 대 중국 무역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 1992년 | 2001년 | 2006년 | 2009년 | 2010년 | * 비중 |
|----------|-------|-------|-------|-------|-------|-------|
| 대중국 무역규모 | 64 | 315 | 1,181 | 1,409 | 1,815 | 21.1% |
| 대중국 수출 | 27 | 182 | 695 | 867 | 1,122 | 25% |
| 대중국 수입 | 37 | 133 | 486 | 542 | 693 | 16.8% |

· 과거 한국 수출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던 비중과 위상을 중국이 대체



· 대일본 적자를 대 중국 흑자를 통해 메우고 있는 상황

<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

| | '05 | '06 | '07 | '08 | '09 | '10(1.1-12.30) |
|-------|--------|--------|--------|--------|--------|----------------|
| 중 국 | 232.7 | 209.0 | 189.6 | 144.6 | 324.6 | 429.2 |
| 미 국 | 107.6 | 95.3 | 85.5 | 80.1 | 86.1 | 85.5 |
| 일 본 | △243.8 | △253.9 | △298.8 | △327.0 | △276.6 | △348.8 |
| 중 동 | △351.5 | △480.7 | △478.2 | △750.0 | △375.7 | △516.4 |
| E U | 168.3 | 190.7 | 191.6 | 183.9 | 143.8 | 140.9 |
| 홍 콩 | 134.9 | 168.8 | 165.1 | 175.5 | 181.7 | 224.8 |
| 중남미 | 79.7 | 106.6 | 142.5 | 191.7 | 150.8 | 217.1 |
| ASEAN | 13.7 | 23.2 | 56.4 | 83.7 | 69.3 | 84.4 |
| 아프리카 | 32.6 | 33.6 | 39.4 | 53.3 | 52.8 | 49.3 |

출처: 지식경제부, “2010년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수출입 전망,” (2011.1.1) 등

- 그러나 실재는 한미(일) 동맹 강화 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심화의 대립

-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 표출
- 연평도 사태와 포 사격 훈련 강행의 대응, 그 외교적 참사
- 일본과 군수부문 및 정보부문 군사협정 추진

○ 미국과의 동맹 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의 딜레마에 대한 대안은?

- ‘최소 접근법’ 과 그 한계

- ‘최소 접근법’ : 최소한 한미동맹 유지와 중국과의 관계 심화라는 두 가지의 목

표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북한 문제 접근법에서 흡수통일론 배제/ 양안 등 중국의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합동훈련 자제와 동맹 변환의 지역 개입 가능성 최소화) 주장

※ 노무현의 노선 변경, 하토야마의 좌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된 동맹관계를 수정하고자 했던 노무현 정권이나 하토야마 정권의 노력 좌절. 중국과 무력충돌까지 낳을 수 있는 사태 개입에 대한 우려는 표명되었으나 결국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되었고, 한미동맹의 총체적 강화는 한미 FTA 추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중국 등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 후텐마 기지 이전 협상 재고 등을 통해 미일동맹을 일정하게 수정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민당 시절의 대미 대중 관계로 회귀하고 많.

·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불균형성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는 것과 함께,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한, 일의 정책이 공히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 미국의 반대와 정권 흔들기, 미군 철수 혹은 동맹 약화, 동맹 내 지위의 상대적 약화 등 다양한 공세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각국 내 보수 진영의 공세, 북한·중국과의 안보·외교상 긴장의 잔존과 대두(핵실험, 센카쿠열도 갈등) 등에 의해 좌절.

·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굴기는 이런 경향을 강화시킬 가능성.

· 한계의 귀결 : ‘최소 접근법’의 한계에 따른 미국에 대한 일방적 경사로의 회귀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이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라는 대안의 현실화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미·중 갈등이 전면화된다면, 그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

-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한계

· 경제적 긴밀화 대 진영 간 대립 :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던 90년대 초에 비해 한·중 간 무역량,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 인적교류의 증가는 앞의 그림과 표에서 보듯 따로 언급이 필요 없는 수준.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하지만 90년대 초 미국이 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던 지위를 중국이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대체하기는커녕, 동맹강화대 외교·안보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음. 일본은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이

명박 정부 이후 그런 상황이 두드러짐.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일본이나 한국에 직접적 위협을 주기는커녕 그 성장에 힘입어 양국의 경제회복이나 성장의 중요한 기제로 삼았음에도 그러함.

∴ 경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저절로 안보 차원의 협력·평화적 관계의 정착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한·중·일의 관계에서는 명확히 드러남.

- 대안의 모델 : 지역 차원의 안보와 평화 차원의 구체적 협력과 그 경험의 축적·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럽에서 배워야 할 모델은 (같은 체제간의 경제협력에 기초한) EC보다는 (상이한 체제간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라고 생각됨.

－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 형성과 동맹의 점진적 해소

- 9·19 공동성명에도 이런 정신은 반영됨. 그러나 구체적 실천은 거의 부재
- 적극적 실천과 안보 갈등 해소 및 평화 진전을 위한 과감하고 직접적인 접근법 요구됨
-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기초 형성과 미국과의 동맹의 병립 →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등과 맞물려 군사동맹의 점진적 해소(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동시 폐기,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 등)
- 3차원비핵화의 비전³⁾ : ‘3+3의 동북아비핵지대화’를 매개로 한반도 비핵화 및 핵 없는 세계에 기여. 동아시아 안보 갈등 해소의 적극적 해법
- 동아시아 각국과 이 지역 주둔 미군의 군비 동결과 군축
-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철도 연결, 러시아 천연 가스의 공동 이용, 대북 대안 에너지 체계 공동 공급 등

□ 군축을 통한 평화와 복지의 행복한 만남 : 군축의 의의와 방안

○ 햇볕정책의 한계와 ‘평화복지’의 대안

－ 햇볕정책의 한계

-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햇볕정책은 우선, 동맹관계의 수정과 평화주의에기초한 대외 외교·안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리 현상을 보임.

3)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동북아시아 비핵지대-핵 없는 세상’의 3차원 비핵화의 비전」(국회사무처, 2009.12월)을 참조 바람.

- 게다가 6·15 이후의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를 진전·정착시키거나 군축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평화체제의 경우, 북한 핵 문제의 재연과 북한의 소극적 태도에도 기인한 바 있으나, 군축 등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행해진 군비증강의 경우, 한국이 지난 5년간 외국무기 수입국 세계 3위, 미제 무기 수입국 세계 1위의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역설적 상황을 낳기도 함.⁴⁾
 - 경제적 협력 관계 역시 10·4정상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남한에는 대단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그 협력에 의해 혜택을 본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힘들(탈냉전 이후 유럽 등에서 대대적 군축이 이루어진 것과는 비교됨). 한마디로 평화의 혜택이 돈과 복지, 특히 후자로 이어지지는 못함.
 - 이에 따라 햇볕 정책 혹은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할 튼튼한 저변 형성에 한계.
- 연평도 사태 이후 여론의 동요와 그 함의
- 연평도 사태 이후 30대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깊었던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요가 적었으나, 20대 등은 북한에 대한 불신 증가, 정부의 대북 강경책 지지 기조가 뚜렷했음.⁵⁾
 - 동요하는 중간층과 20대 등을 화해·협력 정책의 지지자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지 “현 정부의 정책대로 하면 전쟁 난다”의 수준이 아닌 평화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필요.
- 군축 부재에서 평화복지로
- 일부에서는 10·4선언에서 밝힌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면 그 부가가치가 컸을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그 효과가 바로 복지로 이어졌을 지는 의문.
- 표-4에서 보듯, 탈냉전 이후 GDP 대비 국방비가 상당 정도 줄었으나 복지비가

4)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http://armstrade.sipri.org/armstrade/html/export_toplist.php 등 참조. 참고로 국내 언론에는 인디아(9%)에 이어 한국이 중국과 공동 2위로 보도되었으나 절대 액수가 아닌 6%라는 수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5-2009년 3위에 이어 2006-2010년에도 절대 액수에서는 약간의 차이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찌됐든 과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차지하던 지위를 한국이 차지하게 된 것이 이 지스 체계나 F-15K 도입 등 전 정권에서 결정된 정책의 결과이다.

5) 연평도 포격 직후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북 강경책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한 가운데, 30대에서는 대북 온건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42.3%), 20대에서는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71.4%). (아산정책연구원, 2010.11.27, “아산정책연구원 긴급여론조사,” p.6.)

그만큼 증가한 것은 아님. 노무현 정부 당시 복지비가 약간 상승하기는 했지만, GDP 대비 국방비의 비율은 오히려 늘었고 총액은 크게 증가했음.

때문에 평화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 필요.(뒤의 평화와 복지의 관계 단락에서 상술)

표-4. 국방비 현황

| 연도 | 국방비(억원) | GDP 대비 비율 | 정부재정대비 비율 | 전년 대비 증가율 |
|------|-----------|-----------|-----------|-----------|
| 1981 | 2조 6,979 | 5.54 | 33.6 | 20.1 |
| 1991 | 7조 4,764 | 3.31 | 23.8 | 12.6 |
| 1998 | 13조 8,000 | 2.85 | 18.3 | 0.1 |
| 1999 | 13조 7,490 | 2.60 | 16.4 | -0.4 |
| 2000 | 14조 4,774 | 2.50 | 16.3 | 5.3 |
| 2001 | 15조 3,884 | 2.47 | 15.5 | 6.3 |
| 2002 | 16조 3,640 | 2.39 | 14.9 | 6.3 |
| 2003 | 17조 5,148 | 2.42 | 14.8 | 7.0 |
| 2004 | 18조 9,412 | 2.43 | 15.8 | 8.1 |
| 2005 | 21조 1,026 | 2.60 | 15.6 | 11.4 |
| 2006 | 22조 5,129 | 2.66 | 15.3 | 6.7 |
| 2007 | 24조 4,972 | 2.72 | 15.5 | 8.8 |
| 2008 | 26조 6,490 | 2.76 | 15.2 | 8.8 |
| 2009 | 28조 5,326 | 2.79 | 14.5 | 7.1 |
| 2010 | 29조 5,627 | 2.62 | 14.7 | 3.6 |

출처: 『2010 국방백서』, p.317의 부록 20 연도별 국방비 현황.

- 핵문제 해법 등에서의 ‘신 일팔타결’ 등의 적극적 해법과 연동해 남북한 간에도 통상무기 전력에 대한 군비통제, 군축 합의와 실천 등의 적극적 해법 필요. 그것을 통해 남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용해 “평화가 곧 나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요, 복지다.” 라는 실감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저변을 넓혀야 할 것. 이는 북한의 체제 안보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자 북한 군부 등이 핵 포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통상 무기 전력에 있어 한국의 압도적 우위를 조정함으로써 비핵화에도 기여할 것.

○ 정상회담 통한 군축 합의와 군축에 의한 ‘평화복지’ 의 프로세스

: 남북정상회담 등 통해 정전체제의 조속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남북한 간의 (선) 군비동결과 통상무기의 군축 선언

- 군비동결, 군축에 의한 ‘평화복지’ 의 프로세스

- 대폭 증액된 2011 국방예산의 일부(약 8,465억원) 우선적 삭감과 복지 예산으로의

전용⁶⁾ →

- 선제적인 군비동결(전년 수준)⁷⁾ 선언과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축 제의 및 합의
→
-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시 OECD 평균(2008년 1.59%) 수준으로 군비 감축과 복지 예산으로의 전용(총 GDP 대비 1.1% 이상 삭감 가능. 2010년 현재 GDP로 하면 약 12조원) →
- 동북아 평화체제 진전에 따른 대대적 군축(현 일본의 GDP 대비 1% 수준으로 1.7% 이상 삭감 가능. 2010년 현재 GDP로 하면 약 18.6조원).

Ⅲ. 평화와 관련한 이슈 발생 시의 대처

: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하 평화의 원칙)과 비판 유보 불가

□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확고한 원칙이 필요

○ 평화의 원칙 대 힘을 통한 억지론

- 평화는 힘을 통한 억지를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음.
- 힘을 통한 억지는 기본적으로 미국 등 강대국이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약소국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따를 것을 강제할 때 쓰는 방법이요 제국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것임. 이것을 수용하면 군비증강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한국과 같은 약소국은 미국 등과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름.
- * 안보가 평화의 동의어는 아니지만, 억지에 기반한 평화는 타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국의 '절대 안보'를 추구하게 됨. 그 절대 안보는 자국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강력한 힘을 가진 동맹을 요구하게 됨.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체제 등은 기본적으로는 북한, 중국 등을 나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6) 2010 연말 날치기 통과 예산 중 국방부 예산 관련 진보신당 수정안

: 방위사업청 주관의 방위력 증강 사업 중 K-계열의 기술적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 한반도 안보 유지에 불요불급한 전력의 도입과 개발 사업,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의 한국 부담 등 타당성이 없는 사업 등의 예산 8,465억여 원 삭감.

구체적 삭감의 근거와 내역은 “국회 통과 국방 외교 통일 예산에 대한 진보신당 수정안” 등 참조 바람.

7) 동결의 근거와 내역, 의의 등은 진보신당 홈페이지 정책 게시판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방예산 동결!” 등 참조 바람. http://www.newjinbo.org/xe/?mid=bd_policy_jinbo&page=2&document_srl=910928

그들의 안보도 나의 안보의 전제라고 하는 ‘공동안보(론)’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가 미국과 한국 정부의 강경책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패권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철학에 기초한 것이고, 북한의 반발을 사 평화는커녕 적대적 관계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 그리고 이 와중에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북한의 민중뿐만 아니라, 남한 민중의 복지와 권리 쟁취를 위한 정당한 요구가 묻히고 묵살될 수 있기 때문.
- 때문에 우리는(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에 의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을 주장함.

○ 북이 평화의 원칙을 훼손 시 어떻게?

- 문제는 북한이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 핵실험이나 연평도에 대한 포격 등 힘을 동원하여 자기가 의도하는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임.
- 당연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원칙과 관점을 가지고서 비판해야 함.
- 북한의 처지는 다르다며 비판을 유보할 수는 없음: 뒤에 상술

○ 비판의 분위기와 정서에 휩싸여 강경책에 부화뇌동하거나 침묵을 지킬 수도 없음 : 평화 원칙 수호의 만만찮음 대 타협의 폐해

* 사례) 연평도 사태 전개의 교훈

: “북의 연평도 포격 이후, 민주당 등이 북한의 추가도발 시 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강경 대응을 포함하고 있는 ‘대북 규탄 결의안’에 동의했다. 그리고 4대강 예산을 국방예산 증강에 돌린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위기의 순간에 평화적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며, 그들이 과연 평화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예이다. 그들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유지를 받들고 이어갈 세력으로 자임하고 있지만, 그들이 연평도 사태 직후 보여준 행보는 1차 핵실험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행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관리론을 이야기하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군사력이 햇볕정책 추진의 받침이라고 주장한다. 역으로 현 정부가 군비증강에 소홀했다고까지 비판한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의 국방예산 증강 때문에 북한이 두려워서 도발을

일으키지 않았나?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동기를 아예 갖게 하지 않는 것의 핵심은 화해 협력의 정책이지, 미국식의 압도적인 군비를 통한 억박지르기가 아니다. 후자는 비대칭적 도발에 취약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다. 까불면 전면전을 일으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정책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군비증강을 통한 북한 도발 억제 논리는 북한이 도발을 하는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응징을 하겠다는 논리 혹은 그런 힘의 과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저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올지라도 북한에 대한 강경책에 동의하거나 협상을 팽개치자는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 우리마저 분위기에 갇혀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북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진영 간 대결이라고 하는 자멸적 행동에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나?

그리고 그런 충돌의 상황이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바라는 심리를 강화시키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장하던 노무현, 하토야마 정권처럼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회귀하게 되는데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일촉즉발의 위기감이나 신냉전 도래의 우려는 올 1월 미중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상당히 불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천명된 남북관계의 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여전히 한국민의 다수는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하며, 대북 정책 일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화해 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거대야당도 이제 대화를 촉구한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 걸지 못하면 상황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안적 정책을 내세워야 할 때도 과거의 관성에 따른 정책만을 제시할 때, 대중은 의구심을 느끼고 우리 곁을 떠나갈 것이다.”

□ 북한이 핵실험, 군사적 도발 시 비판을 유보할 수 없는 이유

○ 외부의 시각이나 비판이 문제가 아님

- 비판을 유보할 때 우리가 대중들에게 친북, 혹은 중북주의자로 찍힐 수 있기에 단지 그것을 모면하자는 차원에서 비판을 할 때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
- 수구 언론의 친북·중북의 낙인은 진보진영 내부에서 논쟁을 했기에 발생한 문제가 아님. 대중이 우리에게 대한 신뢰가 있다면 수구 언론의 그런 낙인은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음.

○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평화 정책 주장과 현실화의 전제

- 평화 훼손 행위에 대한 비판, 전쟁 방지와 평화 달성의 방법으로 대화 등 평화적 수단을 옹호하는 입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정부 등의 강경책 비판과 견제, 대안으로서 우리의 정책에 대한 주장이 힘을 가질 수 있음.
-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남한 민중의 시각이요, 그들이 어떤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동아시아 정책을 지지하게 되는가임.
 - 연평도 도발 이후 군사적 보복 조치에도 68.6%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게 됨.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그 지지는 28.2%에 불과했음.⁸⁾
 - 이런 여론에 편승하자는 말이 아님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이야기함.
 -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런 대중의 정서를 어떻게 다시금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것으로 돌릴 것인가임.
 - 북한이 문제가 있는 행위를 저지를 때, 비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없음.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지적해야지만, 우리의 정책과 해법에 대해 대중들이 귀를 기울이고 힘이 실릴 수 있음.
 - “국민(인민) 대중의 지지 없이 어떻게 대북 강경책을 저지·전환시키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겠나?”

IV. 평화와 복지의 관계에 대해

□ ‘평화복지론’

- 연초 조승수 대표의 기자회견, 대담 등에서 발신.
- 햇볕정책과의 차별성, 즉 군축 없는 남북관계 진전이나 평화 정착에 있어서의 한계 지적.
- 20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회의 증폭, 역으로 미국 및

8) 동아시아연구원, 2010.11.28,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 특히 p.11.

군사적 수단에 대한 의존심의 상대적 증가라는 최근의 현실 속,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의 대중적 기반을 (재)구축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

- 군비동결 →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에 따른 군축 →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OECD 평균인 GDP 대비 1.7% 수준) 및 동북아 평화체제 진전에 따른 대대적 군축(현 일본의 GDP 대비 1% 수준). 그 감축 예산의 복지로의 전용의 논리 구조였음.

* 남북 및 동(북)아시아 차원의 대립 해소 및 경제협력의 진전에 따른 평화 이익 및 그에 따른 복지 예산의 확보 등의 연구는 아직 공백 상태.⁹⁾

□ 둘의 관계에 대한 소고

○ “평화 없으면 복지 없다” 론의 의의와 한계

- **의의** : 우리 사회의 핵심적 화두로 떠오른 복지를 위해서도 평화의 유지와 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목소리일 수 있음.
- **한계 혹은 문제점** :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증강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에서 한가롭게 무슨 복지냐?” 라는 우파의 담론에 이용될 수도 있음. 현재 한국 우파의 복지에 대한 반대의 주된 논거는 우리의 경제 수준 등이나, 80년대까지는 ‘분단 혹은 북의 남침 야욕 →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 투입 →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에 투자하기 힘들’ 이라는 논리 구조였다고 할 수 있음.

남북 간에 2010년과 같은 충돌이 재연되거나, 중국(·일본) 등의 군비증강(과 우경화)이 눈에 띄게 진행된다면, 그런 논리는 재생산될 수 있음. 적어도 국방예산의 증액에 반대하고, 군축을 주장하며 그 예산을 복지로 전용하라는 주장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임. 이런 현실은 평화 없으면 복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의 실패 보다는 북한의 행위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평화 없으면 복지 없다는 주장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봄.

- **복지의 당위성 주장에 있어** :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에 과대한 예산을

9) 10.4정상선언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참여정부 말기에 작성된 적은 있음. 김영윤, 2007,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통일연구원) 등.

퍼붓는 반면, 군비증강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음(노무현 정부 등에 비해 오히려 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때문에 복지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평화 없으면 복지 없다는 논리보다는 ‘부자 감세 철회와 4대강 예산의 복지로의 전용’ 등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복지를 경제 등 국정의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놓을 것인가라는 국정 전반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요, 그것을 담보할 세력 등 정치적 문제임을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음.

*** 참고:** 아랍 국가들과 상시적인 긴장 상태, 준전시상태인 **이스라엘**의 경우 2008년 당시 GDP 대비 국방비는 약 7.3%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비(표-5의 사회보장, 보건)의 비중은 약 16.8% 정도로 한국의 (국방비 비중 2.7%,) 7.7% 수준을 크게 상회함.

한국의 국방비 비중은 70년대 GDP 대비 6%, 전체 예산 중 약 1/3에서 80년대 이후 점점 낮아져 90년대 중반 이후 각각 2.5%, 15% 수준으로 낮아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비가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았음.

표-5.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이스라엘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교
(GDP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2008년 기준)

(단위: %)

| 분야 주요 국가 | 총지출 | 일반공 공행정 | 국방 | 공공질 서 및 안전 | 경제 사업 | 환경 보호 | 주택, 지역 사회 개발 | 보건 | 오락, 문화, 종교 | 교육 | 사회보 장 |
|-------------|-------|------------|------|------------------|----------|----------|-----------------------|------|------------------|------|----------|
| 이스라엘 | 44.30 | 5.60 | 7.26 | 1.68 | 2.70 | 0.66 | 0.53 | 5.51 | 1.66 | 7.40 | 11.30 |
| 스웨덴 | 52.49 | 7.77 | 1.49 | 1.37 | 4.29 | 0.35 | 0.77 | 6.96 | 1.15 | 6.94 | 21.38 |
| 미국 | 38.74 | 4.93 | 4.60 | 2.23 | 4.09 | 0.00 | 0.69 | 7.95 | 0.31 | 6.43 | 7.51 |
| 일본 | 36.97 | 4.71 | 0.93 | 1.42 | 3.68 | 1.23 | 0.60 | 7.44 | 0.12 | 3.89 | 12.94 |
| OECD 평균 | 44.83 | 5.88 | 1.59 | 1.71 | 5.07 | 0.71 | 0.79 | 6.44 | 1.26 | 5.56 | 15.83 |
| 한국 | 30.45 | 4.29 | 2.72 | 1.33 | 6.64 | 0.96 | 1.08 | 3.94 | 0.76 | 4.95 | 3.78 |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http://stats.oecd.org/>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분야별 지출 비교,” 특히, p.7.

○ “복지 없으면 평화 없다” ?

- **의의** : 복지를 통한 진보 지지 세력의 재구축만이 평화정책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이 평화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민중에게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지지기반이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음. 그리고 단지 전쟁(분쟁) 부재만의 소극적 평화가 아닌 살인철폐 등의 구조적 폭력이 부재한 적극적 평화로 평화의 의미를 확대하는 것일 수 있음.
- **문제점** : 복지와 평화를 억지로 가져다 붙이려는 것 아니냐, 양극화나 복지에 소극적인 정책의 바탕은 신자유주의적 인식과 정책에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별도로, 햇볕정책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한 한계, 군축 등을 먼 미래의 과제로 돌린 한계 등을 각각 지적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칠 가능성 큼.

○ 소결 : 평화와 복지의 매개변수로서의 군축

- 평화와 복지,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독립변수라고 하기보다는 적절한 매개변수로서 군축, 그 적극적 추진을 가능하게 할 한반도 및 지역 차원의 평화체제 형성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함께, 평화와 동반하는 경제협력에 의한 복지의 넓은 기반 구축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할 듯함.
- “평화 없으면 복지 없다” 는 담론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듯함. 물론 전쟁 상태가 되면 복지는 불가능. 그러나 긴장이 상존하거나 고조된다고 해서 복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이스라엘 대 탈냉전 이후 한국의 사례(이스라엘에 비해 국방비의 비중은 훨씬 낮으면서도 복지비의 비중도 훨씬 낮은 한국)가 입증하듯이 그것은 정치 철학과 정치적 역관계의 문제.

물론 표-5에서 보듯, OECD 평균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이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과도한 군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비 지출을 위해서는 평화체제 형성을 통한 군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음.

- “평화 없으면 복지 없다” 는 오히려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 듯함. GDP 대비 약 15%의 과도한 국방비를 쓰고 있는 북한의 경우, 평화체제의 진전과 정착에 따른 군축이 없다면 주민 생활의 개선은 힘들 것임. 즉 군축을 반드시 담보하는 평화체제의

진전과 구축은 남한에 있어서는 복지의 확장을 위해, 북한에 있어서는 경제 회생, 인민의 생존권 확보와 복지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사회당의 기본입장

|| 사회당

1. 상황 인식: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위기

1) 북핵개발과 53년 정전협정체제의 정지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에서 분단과 전쟁 위기를 관리해 오던 정전협정체제는 위기관리 기능을 상실했다. 한반도 역내 문제일 수 없는 핵개발의 특성 때문에 6자회담이 정전협정체제를 대체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위기관리기구로 등장하였다.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반도 역내문제가 아니라 6개국이 합의하는 광범위한 동북아 평화체제의 일환으로서만 수립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지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임을 늘 천명해 왔지만 핵개발을 평화협정, 북미정상화로 나아가는 지렛대로 사용한다. 지금까지 6자회담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정상화를 맞바꾸는 데 실패하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은 지연되고 있다.

3) 신 냉전의 군사지정학

MB정부는 '햇빛정책'을 부정했고 호전주의를 택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로 동북아는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이 대립하는 신 냉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이 대규모화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를 벗어나 중미 관계를 염두에 둔 무력시위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그 밖에 한일관계에서도 한일군사협정 체결이 추진되는 등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결적 군사지정학을 형성해 가고 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신 냉전은 동북아 군사지정학의 기본 양상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미일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대결적 군사지정학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한체제의 안정을 당면 시기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게 만든다. 대결적 군사지정학의 고착화시기에 북한의 전략은 선군세습체제의 안정화이다. 신 냉전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북한은 당장의 대결국면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고 세습을 공고히 하는 일에 전략목표를 설정한 것 같다. 연평도 국면에서 보여 주었듯 중국은 6자회담이 조속한 개최를 원했지만 한미일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는 신 냉전을 해소함에 중국이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신 냉전은 북한 포위라기보다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4) 중미의 경제지정학

미국경제위기 이후 중미의 경제지정학은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다. 과거 일본이 하던 역할을 중국이 대신하여 달러 리사이클링이 이루어지던 브레튼우즈2는 금융위기와 함께 위기 속으로 치달았다. 미국의 달러화 증발 정책과 중미 간의 환율 전쟁은 2010년 중미 간의 경제지정학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경제지정학은 천안함 이후의 대결격화의 군사지정학으로 표현된다. 동북아 신 냉전이 장기국면인가 아니면 잠정적 현상인가는 중미간의 경제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관계가 재전형화되어 대외경제관계에서의 위기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한번 형성된 군사지정학은 설령 주변화될지라도 경제지정학에 대한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며 장기 존속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평화주도 국가의 부재

동북아 신 냉전이 장기간 동북아에서 국가간체제로 성립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결빙기에 지나지 않는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동북아 6개국 중에서 평화주도 국가가 없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사항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신 냉전체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신 냉전 형성의 초기에만 타당한 가정이다. 중국 역시 신 냉전이 체제화되면 얼마든지 북한식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은 선군세습의 안정을 통해, 즉 대결을 통해 상대를 협상에 끌어내고 평화와 안전보장을 획득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신 냉전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미미하다. MB정부 이래로 동북아에서 미중일과 북을 평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적 요소가 사라졌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사회의 평화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 목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1) 6자회담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6자회담은 북핵 해법을 둘러싼 다자간 회담이지만, 북핵 해법 자체가 이미 동북아 평화체제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문제가 되었다. 6자회담은 핵보유국이 중미러 3개국인 비핵국가인 남북일에 대하여 핵사용 및 전쟁 포기, 비핵화 보장 등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종결되어야 한다. 소위 '3+3체제'의 형성이 동북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2)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북핵의 폐기는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체제의 종식과 남북 및 북미의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이 되어야 한다.

3)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

6자회담과 별도로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며,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력도 지대하다. 남북은 상호간 독립적인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는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한다.

3. 전략: 적극적 평화주의운동

1) MB정부의 군사대결노선,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대한 반대운동

대규모 군사훈련, 한일군사협정 등의 문제에 대한 반대운동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매우 높은 편이다.

2)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주도 외교 촉구운동

MB정부의 호전적인 대북정책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판논리를 다층화하고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향적인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주변 4대국에 대한 평화외교 없이 북핵문제나 평화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일 양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MB정부는 이와 같은 평화주도외교를 정반대로 틀었다. MB정부의 외교노선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3) 선군세습국면에서 북한의 무력사용과 호전적인 수사학에 대한 확고한 비판

선군세습체제의 안정화가 신 냉전 정세에 구속된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이 신 냉전 시기에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인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에 긍정요소는 아니다. 이는 신 냉전을 체제요소로 강화하고 말 가능성이 있고 선군세습정치는 반평화적이 된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북한의 무력사용에 대하여 언제나 분명한 어조로 반대할 수 있어야 하며, 호전적인 수사학에 대해서도 그 반평화성을 가감 없이 문제 삼아야 한다. '서울 불바다' 발언 몇 번이면 연평도 포격에 버금갈 정도로 한국 내부의 냉전세력을 부양한다.

4) 적극적 평화운동세력의 사회적 형성

위와 같은 정치적 개입은 전 방위적 평화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운동세력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5) 평화국가 만들기

파병규제법 제정, 헌법상 영토조항 재론, 사회복지무제 도입 등 한국을 평화국가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은, 평화의 열쇠

||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1. 들어가며 : 노동자 의제로 등장한 ‘한반도 평화’

○ ‘전쟁위기’가 만든 ‘단결’

- 민주노총에는, 통일위원회라는 상설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비춰보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역할은 미비했다. 신자유주의 세력의 총공세가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면서, ‘민주노조 사수’,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기에도 급급했다.

- 또한, 우리 내부에 민족적 문제와 계급적 문제의 선 후차적 갈등 지점도 분명히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통일 사업을 어느 특정 정파의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성도 있고, ‘북 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지난해 실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확산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과 목소리가 현장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초지일관된 ‘반통일적,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삼절 정책이, 결국 적아를 명확하게 만들었고, 거대한 투쟁전선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결정책과 전쟁위기가 노동자 민중들을 단결하게 만들고 있다.

- 이처럼, ‘전쟁 & 평화’라는 의제가 국민의제로 등장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이를 인정하고, 투쟁을 하나로 만드는 것. 서로의 관점과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60년 넘게 다른 체제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 온 ‘북한’에 대한 우리 자세도 마찬가지로 여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2. 남북 대결정책 폐기 & 6.15, 10.4선언 즉각 이행

1) 이명박 정부, 통일정책의 문제점

○ 근본적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기, 인수위 때부터 제시한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 첫째는, 남북관계의 조건을, 일방적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많은 단계와 절차가 필요하다. 북핵을 둘러싸고 북미간 대결이 10년을 넘겨 지속되어 온 것이 그 반증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두고, 북한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북한의 핵무기는 군사적 위협수단이라기 보다는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고 발언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의 발언에서도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생존의 위협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 2009년 10월30일 방미한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주국장이 뉴욕의 한반도 안보관련 토론회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전환 없는 핵포기는 절대불가 원칙’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국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보장, 핵 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 등의 약속’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 둘째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북미협상’이다. 북한 핵 보유의 원인인 그 ‘원인 제공자’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 핵 보유의 원인 제공이라 함은, 앞서 밝혔듯이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을 말한다. 그 상대가 ‘미국’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과 미국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양국이 서로 한국전쟁을 통해 물리적 충돌, 교전을 벌였던 당사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상태’로써 정전협정을 맺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이다. 남한은 일찌감치 국군통수권을 미군에 넘긴 상태였

기 때문에 회담에 참여할 자격조차 갖지 못했다. 국제연합군은 이미 해체되고 남아있는 유엔사령부 정도이지만 이마저도 주한미군사령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중국군 또한 이미 북한에서 철수했으며,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위치와는 크게 다르다. 이처럼 한반도 전쟁구조가 그대로 남아, 현재까지 쌍방간의 절대적 위협 관계로 되고 있으며 결국 ‘북미대결’이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다시말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해결 고리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 협상’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이다.

- 이처럼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 전략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2009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포괄적 패키지’ (또는 포괄적 해결책)구상이나, 2009년 9월에 제안한 ‘그랜드 바겐’ 구상 등도 모두 ‘북의 핵포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실현 불가능한 방식이라며 외면했다. 특히 2009년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서, 당시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커트는 냉담한 반응으로 일축했고, 그 해 11월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이라는 표현을 일체 거명하지 않고 무시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의 핵포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이상, 그 어떤 협상도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설계도로 평가 받고 있는 9.19공동성명¹⁰⁾ 합의에 위

10) 9.19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 9월19일) :

1. 6자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것을 일치하게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령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준수되고 리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리용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기타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6자는 호상관계에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공인된 국제관계규범들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쌍무적정책들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국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는 기초우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무역, 투자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방법으로 경제협조를 추동할것을 공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로씨야련방,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에너지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제공과 관련한 2005년 7월 12일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공약하였다.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방도와 수단들을 탐구할것을 합의하였다.

배되고, 국제사회의 동의도 얻기 힘든 이명박 정부의 ‘선 북 핵 포기’ 라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그간 쌓아왔던 남북관계는 최소한 신뢰마저도 무너졌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과 성과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남북간 ‘상생과 공영’ 은 6.15공동선언 체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현재는 ‘상생과 공영’ 체제가 아닌, 극단적으로 6.25전쟁 직전상황인 심각한 군사적 대결과 냉전체제로 후퇴하고 있다.

○ 통일부 계획의 문제점

– 2011년 초, 통일부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원칙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를 추진 전략의 전제로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을 일컫는 말이며, 앞서 밝혔듯이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남북관계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 이번 통일부 업무계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3대 정책추진의 목표에서 볼 수 있다. ①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②바른 남북관계 정립 ③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미로써, 다시 말해 ‘흡수통일’ 을 준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통일부는 명시적으로 흡수통일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 한 다거나 ‘통일에 대비한 준비’ 라는 문구로 대체했을 뿐이다. 이미 통일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북한변화 예측 시스템을 운용하고, 통일세를 상반기 중 입법화하겠다’ 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 을 해야 하는 정부 주무부처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체제 흔들기’ 를 통한 ‘흡수통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 이처럼 통일부 계획은, 북한의 강력한 저항과 충돌을 불러 올 것이다. ‘주민우선 접촉’ 이라는 계획만 보더라도, 북한 정권의 동의 없이 어떤 방법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뜻인데, ‘대북 심리전’ , ‘선전용 빼라 살포’, ‘북파 간첩활동’ 과 같은,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방법 외에는 없다. 이는, 역으로 북한 정부의 주민통제를 강화시키게 할 것이고, 남북간 심각한 충돌을 자초할 뿐이다.

5. 6자는 이상의 일치합의사항들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하기 위한 조화로운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2005년 11월 상순 합의되는 날자에 베이징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남북관계’ 해결방향(과제)

○ MB출구전략! 조건없는 남북대화와 6.15, 10.4선언 즉각 이행

- 한반도 평화는 민족생존의 근본이고, 대화는 평화의 열쇠이다. 지난해 연평도 사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60-70% 이상의 국민들이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이 때문이다. 남북간 대화에 ‘전제조건’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상당기간 대화가 중단되고, 오해와 불신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화 없는 안정과 평화는 기대할 수도 없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현재, 전 세계가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 ‘6자회담 프로세스를 재개할 것을 촉구’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미.중 양국간의 약속으로 읽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지난 2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남북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93.5%가 올해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48.4%)과 부정적인 전망(45.2%)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과거, ‘6자회담과 남북관계’는 상호 일치해 왔고,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조건’처럼 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만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영향력과 입지는 매우 축소될 것이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또한, 남북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태로 악화된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고, 훼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두고 ‘대북 퍼주기’ 정책이었다며 무시했다. 6.15공동선언은,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면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합의였고, 통일 이정표였다. 6.15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교육 및 합작투자, 광산 개발 등 공동의 경제적 협력사업이 진행돼 왔다. 또한, 민간교류의 활성화

화로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왔다. 전쟁의 불안과 공포로 두려워 할 일도 없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이 멈춰지면서 이 모든 평화는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

○ 천안함 전면 재조사, 4개국 공동조사 촉구 및 5.24조치 해제

- 지난 해,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발표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5월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단호한’ 대북 대응조치를 천명하였다. 곧이어 외통부, 통일부, 국방부 등 3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5.24조치’를 발표했다. 외통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및 압박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전면적인 대북교류협력 중단을 발표했으며, 국방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비롯한 심리전 전개, 한미합동 대잠훈련 강화 등을 밝혔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었고, 대북압박과 군사적 대결로만 일관해왔다. 결과적으로, 5.24조치로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고, 북한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에도 실패했다. 결국, 유엔안보리 의장성명¹¹⁾은, ‘북한을 공격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해법으로써 ‘제재와 압박’이 아닌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의 해결 ‘을 촉구하고 나섰다.

- 현재까지, 천안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남북간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불거진 의혹도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다. 북한도 현재까지 결과발표를 인정하지

11)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2010년7월9일)』 :

1. 안보리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6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ere).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deplere),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for).
5. 안보리는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취(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take note of).
7. 이에 따라(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않고 있으며, 공동조사 등을 통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북측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5.24조치와 같은 ‘제재와 압박’에 앞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천안함 사고의 전면재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남.북.미.중 4개국에서 공동조사단을 파견 받아 중립적인 방식으로 천안함 사고원인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유엔안보리 의 장성명의 권고대로,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즉시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간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천안함 사고를 이용하여,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족쇄를 채우고, 남북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안보를 무기로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없다. 지난해 6.2지방선거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끝났다. 오히려 국가적 손실만 초래했다. 민족적으로는,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 전쟁 위험 가중, 남북 군비 경쟁과 국방예산 증가로 나타났고, 대외적으로는, 한중관계 악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 여지 확대, 아프간 재파병과 그 비용 부담,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테러위협 등의 국민 불안만 남았다. 실익은 고스란히 미국이 챙겨갔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었고,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그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명분을 챙겼기 때문이다.

○ 연평도 비극을 막기 위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화 촉구

- 2010년 연평도 비극은 일찍이 예고된 것이었다. 이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로 거슬러 갈 수 밖에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남북한 사이에 ‘육상 경계선’만 설정되어 있고, ‘해상경계선’은 빠져있다. 당시, 유엔군이 북한과 연해수역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NLL(Northern Limited Line)의 **문헌적 의미**¹²⁾에서 볼 수 있듯이, 1953년 8월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당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정책과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북측과의 일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NLL이라는 ‘북방한계선’을 그었다. 이는, **정전협정 제5조 부칙 61항**¹³⁾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그

12) **북방한계선(NLL)의 문헌적 의미(위키백과사전)** : “1953년 8월30일,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Mark Wayne Clark)사령관이 당시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조선 도발을 막기 위하여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북방 진출에 한계선을 설정한 군사작전 한계선”, “유엔군이 명명한 ‘북방한계선’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본 한계선의 이름은 당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북조선 해군의 남진을 막는 ‘남방한계선’으로 이름지어지지 않았고, 당시 군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대한민국 군대 북방 진출을 막기 위한 ‘북방한계선’으로 명명되었다”

13) **정전협정 제5조 부칙 61항** : ‘본 협정(정전협정)에 대한, 수정이나 증보는 반드시 조인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래서 NLL은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 될 수 없다’ 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1996년 김영삼 정권 때, 이양호 국방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문제가 안된다” 고 인정한바 있다.

- 그러나 우리 정부(국방부)의 논리는 조금 다르다. NLL국방한계선이 설정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엔사령부가 NLL을 설정한 이후 북한 측은 이를 알고서도 분명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1972년까지 이 한계선을 준수해 왔다” 는 것을 근거로, “NLL은 사실상 해상불가침 경계선”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며, 논리성도 떨어진다.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방한계선(NLL)설정 자체가 ‘남측의 북진을 막기위해’ 설정되었으므로, 초기에 북측에서는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다. 이후 남측에서,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삼아 북의 월선을 금지하고 봉쇄’ 하기 시작하면서, 1973년 12월에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에서 북측은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연해’ 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승인 받으라’ 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 이처럼, 1973년부터 NLL을 둘러싸고 남북은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1999년 6월15일, 남북 해군은 NLL에서 첫 교전(연평해전)을 벌였다. 그 후에도, 2009년까지 2차례 더 남북간 심각한 교전과 희생이 있었다. 첨예한 분쟁과 군사적 대립으로 인해, 그 어떤 군사적 행동이나,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에 남북은 서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서로에 대한 ‘군사적 도발’ 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서해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발발의 원인이 될 ‘가장 위험한 화약고’ 가 되었다.

- 특히, 지난해 연평도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합참은 **비공개 보고**¹⁴⁾에서 “탄착 지점이 북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 고 시인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도 11월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늘 얘기하는 자기들의 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 **참고1 : (전)주한 유엔군사령관 특별군사고문 이문항씨 회고 중에서**, “클라크는 서해 5도 지역이 유엔군사령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영해 3마일 선을 그었을 뿐이다. 북한이 3마일 안에 들어오면 위반이라는 표시다. 북한은 12마일을 주장하고, 우리는 3마일을 주장해서 정전협정에 해상 분계선을 못 만들었다. 당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영해가 몇 마일이라는 규정도 없이 흐리멍덩하게 돼 있다. 애초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는 남한 측에서 그 선 이북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지, 북쪽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 **참고2 : (현)미국 국제정책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 셀리그 해리스 국장 발언에서**, “남북한의 서해 분쟁을 끝내려면, 미국이 분쟁지역에서 NLL이라 불리는 해상 경계선을 약간 남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 동의 없이 유엔군이 급히 도입한 선이다. 1950년 7월 유엔 안보리가 미국에 주한 유엔군사령관 지명 권한을 준 만큼 미국에는 NLL을 재설정할 권한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남북 양측과 NLL해상 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협의해야만 한다”

14) 국회사무처, [국방위원회 회의록(임시회의록)], 2010년 11월24일, 6쪽

계선이 조업구역 바로 북방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조업구역 위 측에 사격하게 됩니다” ,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제일 이쪽 북측 ‘계선’ 에 붙여서 조업구역 위측에 사격을 합니다” 라고 훈련 폭격 지점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포격전 다음날 북측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들은 끝끝내 13시경부터 연평도에서 우리측 령해에 수십 발의 포사격을 가했다” 고 분노했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북측에서 “호국훈련이 사실상 실제 공격이라며, 훈련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고 설명한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의 ‘남측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격’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무고한 민간인 2명의 희생에 대해 북측에서 ‘유감’ 의 뜻을 전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상황의 잘잘못을 떠나, 서해상은 그만큼 민감하고, 위험한 지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 이 남북간의 이런 비극을 불러온 것이다.

- 그러나, 이런 비극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남북간 ‘서해평화협력지대화’ 합의를 이행하고 실천한다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꿔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NLL을 둘러싸고 남북 상호 간에 응징과 보복으로 이어져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내놓았다. 그 구상이 ‘10.4정상선언’¹⁵⁾에서 합의된바 있다.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협력지대로 설정한다면, 지난해 연평도 사건과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NLL에 인접한 ‘해주’ 를 통하는 직항로가 열린다면, 남북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북한의 개혁.개방’ 이라는 차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화’ 를 위한 남북의 정상과 군 차원에서, ‘10.4합의에 대한 이행(실천)’ 의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 민간자주교류 전면 보장 및 남.북 노동자 연대사업의 전면 보장

-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남.북 사회문화 분야의 회담이 단 1건에 불과하다.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사업도

15) 10.4정상선언(2007년 10월4일) 내용 중에서 :

3항 :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5항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8년 3건, 2009년 0건, 2010년 1건이었다.

정부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대화와 교류는 언제나, 다양하게 열려있어야 한다.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접촉만이 통일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민간 교류가 갖는 이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통일준비를 말하면서, 통일로 가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을 봉쇄하고 있다.

- 남.북 노동자 연대사업도 대부분 불허됐다. 남.북 노동자 공동사업은 2007년 5월(5.1절)이후 단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다. 대표자회담도 사실상 2007년 이후 함께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5.1절 남북노동자 공동행사를 추진할 때도,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도, 북이 남으로 오겠다는 것’ 도 모두 불허했다.

얼마전, 키리졸브훈련을 앞두고 또다시 남북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평화선언문’ 을 채택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주의조치’ 를 보내왔다. 이처럼 사실상 남.북 노동자들의 연대사업은 전면 중단됐다고 봐야한다.

- 정세가 어려울수록, 민간자주교류와 남북 노동자 연대사업을 전면 보장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자금종류 | '06 | '07 | '08 | '09 | '10 | 합계 |
|----------|---------------|------------|---------|---------|---------|---------|--------|-----------|
| 경상 사업 | 남북교류 협력지원 | 인적왕래지원 | 5,289 | 1,698 | 2,721 | - | - | 9,708 |
| | | 사회문화협력지원 | 7,375 | 6,908 | 3,847 | 3,029 | 2,119 | 23,278 |
| | | 소 계 | 12,664 | 8,606 | 6,568 | 3,029 | 2,119 | 32,986 |
| |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 이산가족교류지원 | 9,908 | 26,918 | 18,241 | 2,152 | 1,987 | 59,206 |
| | | 인도적지원사업 | 212,536 | 227,193 | 59,694 | 29,367 | 19,196 | 547,986 |
| | | 경협기반조성(무상) | 152,091 | 172,540 | 110,074 | 41,461 | 17,676 | 493,842 |
| | | 소 계 | 374,535 | 426,651 | 188,009 | 72,980 | 38,859 | 1,101,034 |
| | 합 계 | | 387,199 | 435,257 | 194,577 | 76,009 | 40,978 | 1,134,020 |
| 웅자 사업 | 인도적사업(웅자) | | 3,939 | 140,491 | - | - | - | 144,430 |
| | 남북교류 협력지원 | 교역경협자금대출 | 47,910 | 56,631 | 10,807 | 15,416 | 41,569 | 172,333 |
| | | -교역대출 | 7,327 | 8,288 | 7,834 | 8,416 | 31,243 | 63,108 |
| | | -경협대출 | 40,583 | 48,343 | 2,973 | 7,000 | 10,326 | 109,225 |
| | | 경협기반조성(유상) | 23,065 | 83,369 | 25,820 | 8,596 | 3,703 | 144,553 |
| | 경수로사업 | 경수로사업대출 | 8,883 | - | - | - | - | 8,883 |
| | 합 계 | | 83,797 | 280,478 | 36,639 | 24,012 | 45,272 | 470,198 |
| | 총 계 | | 470,995 | 715,736 | 231,204 | 100,021 | 86,250 | 1,604,206 |

▲ 자료 출처, 통일부 '2010년 12월 남북협력기금통계'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을 위한 제언

○ 2005. 9.19공동성명 이행 & 6자회담 재개

- 한반도의 평화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정전체제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불신이 증폭되었고, 서로가 적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앞서 밝혔듯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도,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에서 시작된다. 국제사회가 9.19공동성명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설계도’ 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9.19공동성명(2005년)은, 한반도 비핵화(남북비핵지대화+미국 평화보장), 북미관계 정상화(상호주권 존중),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협상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 방식은 ‘행동 대 행동’을 원칙으로 했다. 9.19성명의 초기 이행조치인 2.13합의(2007년)가 발표되고, 북은 6자회담 관련국의 ‘북핵 불능화 실사단 ‘ 방북을 허용하고, 영변원자로 냉각탑까지 폭파하였으나, 미국은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을 이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북을 ‘ 테러지원국 ‘에서 해제하였지만 해제 시점을 반복적으로 연기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 전략적 인내 ‘라는 대북정책(소극적인 태도)으로 일관하면서 북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미국은 즉각 9.19성명을 이행해야 한다.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 만약,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10.3합의대로 6자회담이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천안함이나 연평도와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9.19공동성명 합의대로, 한반도 평화포럼이 구성되어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논의되었을 것이고, 불안한 정전체제와 분단체제는 서서히 붕괴되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대화가 정체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1년, 무엇을 할 것인가?

|| 조성우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정부 발표 대로라면 남과 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해에서 세 차례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2009년 11월 10일의 대청해전,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사건, 그리고 이어 11월 23일 벌어진 연평도 포격사건이 그것이다. 세 차례 충돌을 통해 남과 북은 ‘한 대 맞으면 반드시 두 대를 때려야 한다’는 ‘응징과 보복’의 원리가 자리잡게 되었다. 남과 북의 치명적 공격무기들이 비좁은 서북해역으로 속속 결집되면서 이제 양쪽의 군대는 새로운 ‘결전’을 준비하는 양상이다. 서북해역은 NLL이라는 국제법적으로 불완전한 경계선과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 그리고 군사적 주도권 다툼이 매우 첨예한 지역으로서, 이곳에 남과 북의 핵심무기들이 결집되는 것은 마치 한 우리에 사자와 호랑이를 동시에 집어넣은 형국이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관리의 틀이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남과 북은 우리나라 서북해역에서 이전까지 이어져 오던 ‘위기관리’의 목표와 원칙에서 벗어나 군사적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한 ‘군사안보주의’로 급속하게 치달았다. 여기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지되어 왔던 위기관리의 원칙이란 군대가 우발적으로 충돌하더라도 남과 북의 정치권력이 ‘막후협상’을 통해 서로의 진의를 확인하고 위기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대화의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도발의 양상을 예측하는 군사정보나 군사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그러한 도발을 자행하는 ‘정치적 의도’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쿠바에 전략미사일을 배치하던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해안을 봉쇄하는 한편 막후협상을 진행했다. 터키에 있는 미국의 전략미사일을 철수시킴으로써 후르시초프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벼랑 끝’에서 그 옆의 ‘완만한 경사’의 언덕으로 소련을 안내했다.

남의 고속정과 북의 경비정이 교전을 하더라도 그 이외의 전력, 예컨대 전투기나 구축함, 장사정포와 같은 더 위협적인 전력은 후방에서 대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만 대비했다. 그리고 이전에 상대방의 의도를 판단함으로써 조기에 교전을 종결지었다.

교전 발발 직후 남북 간에는 핫라인이 가동되었고, 정치권력이 막후협상에 뛰어들었다. 북한으로부터도 유감 및 사과 메시지가 왔다. 2004년에는 남과 북 함정 간에도 상호 호출부호를 정한 핫라인이 개설되었다. 2007년에는 제5차, 제6차 장성급 회담을 통해 서해 평화정착에 대한 논의가 남북 군부 간에 논의되었다. 이 외에도 남북 간에 ‘해운합의서’를 통해 서해의 평화적 관리에 진일보된 성과를 이루었다.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서해의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다. 대화가 진행되는 한편으로는 청와대에 NSC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서해의 위기를 대통령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위기대응 매뉴얼도 나름대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위기관리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가?

과거에 극소수의 북의 경비정과 남의 고속정이 충돌한 교전이 링 위에서 선수만 싸우는 분쟁이었다면, 이제는 모두 링 위에 올라가 패싸움 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남북 간의 대화, 핫라인이 모두 붕괴된 상황에서 소규모의 국지적인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위기관리의 기제가 부재한 것이다.

둘째, ‘문민통제(civil control)’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수상함끼리의 교전이 아니라 자·해·공 합동전력 무엇이든 동원될 수 있는 상황으로 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보다 현대적인 전쟁 수행방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떤 전력이든 동원될 수 있는 서해에서 분쟁은 예전에 비해 템포가 빠르고, 통제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양상이다.

북한의 경우 백령도에서 50km 거리에 공기부양정으로 30분 내에 우리 도서지역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서해 일원에 100문 이상 신형 장사정포와 야포 전력을 보강한 상황이다. 북이 남측을 위협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속도의 혁신’이다. 경고 없이 순식간에 남을 위협할 수 있도록 시간의 개념을 변화시킴으로써 서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 이상 남측에 밀릴 수 없다는 북한 정치권력의 의지는 매우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측은 ‘국방개혁 307계획’을 통해 ‘적극적 억제’ 전략을 표방하여, 북 핵심목표에 대한 정밀타격과 북한 장사정포를 조기에 마비시키는 새로운 작전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서 탈피한 새로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 도입, 무인정찰기 도입과 더불어 북한 장사정포와 특수부대를 마비시키기 위한 군사적 자산을 갖추는 방향으로 국방개혁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서북 도서에는 이미 해병대 병력이 증강 배치되었으며, 새로운 레이더체계, K-9 자주포와 정밀타격 단거리 미사일인 달라일라 등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가 대거 증강된 서북 도서들은 ‘요새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분쟁 양상은 과거 1, 2차 연평해전과 달리 경고 없이 빠른 템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통제하기 쉽지 않은 분쟁이 되었다. 즉 ‘문민통제(civil control)’의 취약점이 확대되는 아주 위험한 양상의 분쟁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

북해역에서의 이러한 분쟁 양상은 전 전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이제 중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계획’에 의한 전투는 불가능하고 현장 지휘관의 직관에 크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양 측의 군대는 한반도 차원의 위기관리를 고려할 정도로 ‘똑똑한 군대’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군사행동에 경도될 가능성이 크고, 현장 지휘관의 경우 ‘전공’과 ‘전승’의 유혹에 깊이 빠져들 것이다. ‘패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결국 적극적인 군사행동으로 연결되면 정치권력이 분쟁을 통제할 여유도 없이 교전규칙을 넘어서는 가능성이 높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백악관은 맥나마라 국방차관으로 하여금 해군 상황실을 장악하도록 하여 가까스로 3차 대전을 막았다. 당시 해군은 “표준운영절차(SOP)상 해상 작전은 해군 소관”이라며 정치권력의 확전 차단 의지에 저항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문민통제를 관철하였기에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상당수 병역면제자들로 구성된 국가 위기관리 그룹들은 그러한 문민통제를 관철시킬 실력도 부족하거나 지식과 경험, 철학이 빈곤한 허약한 집단이다. 이 점은 연평도 사건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과연 우리나라에 분쟁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두뇌들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안보 불안이다.

셋째,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연평도 포격사건의 결과 서북도서에는 ‘군사 요새’로 변하고 있다. 서북 도서들은 관광 기지, 어업기지로써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던 해역이었으나 이제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 이미 연평도의 경우 거주하는 주민보다 해병대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군사기지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서북 5도서에는 이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잦은 어업통제로 생존권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게다가 여객선의 우회 항로로 인해 1시간 이상 운송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전력이 도서지역에 투입될 경우 주민의 주거형태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유대인 정착촌과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증강으로 주민들 상당수가 육지로 이주하면 북한이 민간인 지역에 도발하였다는 국제적 비난 여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

영토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게 되어 주민이 이주한다는 것은 영토로서의 가치를 저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에 상당한 손실이다. 또한 주민의 생활 보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 문제를 유발시킬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논리에 입각한 방어개념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수도권에 항상 긴장상태에 놓인다는 안보 딜레마로 이어진다. 잘알려져있듯이 내년에는 50개국 정상에 참여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상반기에 개최되고, 3년 여 후에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외국의 정상들과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관문은 인천의 국제공항이다. 여기에 북이 연일 전자파를 발사하고 수시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국가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받는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3일에 최초로 북한이 GPS 교란을 시도했을 때 가장 먼저 신고를 한 당사자가 인천 국제공항이다.

한편 북한도 서북해역의 분쟁지역화로 인해 초래될 손실이 만만치 않다. 장차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해주와 남포를 개방하는 것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NLL이라는 ‘봉쇄선’이 계속 도사리고 있을 경우 북의 개혁과 개방에도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해의 분쟁지역화는 90년대 이후 우리가 줄곧 외쳐왔던 ‘서해안 시대’라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전략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서해안 시대를 외친 배경에는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분쟁지역화 될 경우 그러한 비전은 불가능하다. 서해의 안보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미 항공모함이 동원된 한미군사연습이 진행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매우 거셀 것이다. 중국은 서해에서 공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할적 이익(vital interest)’이 걸린 ‘근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조지워싱턴 미 항공모가 서해에 들어올 당시 중국의 반발로 미중 간에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미 서해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이 충돌하는 국제화된 분쟁지역으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다.

넷째, 국방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새로운 결전을 준비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들로 꽉 채워져 있다. 일견 북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다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북의 새로운 위협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 자체가 논란거리다. 예컨대 국방부와 합참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12만(2007년)에서 18만(2009년), 20만(2010년)으로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2만 명밖에 갖고 있지 못한 특수부대를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무슨 방법으로 매년 몇 만 명씩 늘리고 있다는 것인지 근거도 미약하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못 보던 건물 하나만 생겨도 부대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합산한 결과 나온 수치다. 이렇게 특수부대 병력이 늘었다면 다른 부대에서는 병력이 줄어야 하는데 국방부 셈법으로는 느는 것만 있고 줄어드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위협을 그대로 인정하는데다가 북한의 공기부양정, 인간어뢰부대, 신형 잠수정, 신형 장사정포, 전자파 교란, 사이버 침투 등 치명적 위협이 몇 배, 심지어 몇 십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합산하고 핵과 장거리미사일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위협은 우리의 대응범위를 초월한 쓰나미와 같이 되고 말았다. 이에 연동하여 우리의 국방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우리의 역량으로 안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자가당착의 결론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궁색하게 내 놓은 적극적 억제, 즉 정밀타격이란 개념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심 목표에 대한 정확한 표적을 선정하였는지도 의문이지만, 얼마나 많은 표적을 어떤 상황에서, 누가 그런 타격하기로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

제조차 안개 속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작전계획을 완전히 초월한 새로운 작전개념과 계획이 요구되는데,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아직도 들리지 않는다. 북의 위협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비대칭 위협’ 논의는 제대로 공론화 된 바도 없다. 사실 비대칭이란 개념은 군사적 조치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위협이라는 게 본질적 의미다. 군사와 비군사 구분 자체가 모호하고 전시와 평시의 경계선도 희미한 게 비대칭이다. 따라서 정말 비대칭이 문제라면 우리의 정치, 외교, 경제, 정보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북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전략 구상이 나와야 하고, 군사는 그 중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앞의 것들이 생략되고 군사적 조치만을 앞세우는 현재의 위기관리는 궁색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비과학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한 ‘맹목적 군사주의’가 될 것이고, 남북 관계에서 또 다른 돌파구를 스스로 봉쇄하면서 위기관리에서도 실패하는 무모한 결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

앞에서 말한 문제점들이 계속 구체화될 경우, 향후 어떤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한 번 만들어진 위기구조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더 큰 고민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남과 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진지하게 평화문제를 협의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각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먼저 오늘의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 위험한 위기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금 당장 스스로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차원에서(안되면 야당들만이라도) 사태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남북대화에 적극나서야 한다.

둘째,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은 분리대응해야 한다. 연평도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남북간 군사긴장완화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할 일이지만, 천안함 사건은 이를 둘러싼 남북간 주변국가간의 논란과 이견이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었그제(3월23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기자회견’에서 제안되었듯이 ‘천안함침몰의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추가조사와 검증이 필요’ 하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조사등의 방법으로 검증에 나서야’ 하고,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엄정한 문민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남과 북의 정치권력은 각기 군부의 강경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 다닌 측면이 강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군부가 NLL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 ‘교전수칙’을 비롯한 각종 군사지침을 수시로 변경시킬 때 진보진영과 언론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저 수수방관하기만 했다. 이명박 정부가 위험한 정권이지만 진보진영의 집중력 부족과 무력함 역시 위기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통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관계에서 일방주의를 극복하는 국제법적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북한이 GPS 전자파 교란을 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대북 전단

지를 정부가 살포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제법 위반이다. 사실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심리전·전자전은 이미 전시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국제법적인 논리의 기반 위에서 NLL과 현재 남북의 비정상적인 적대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상황은 남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고 있기도 하다. 더 늦기 전에 평화에 대한 비전과 원칙을 세우고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탈냉전기 진보의 평화전략을 위한 시론

|| 송주명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공동집행위원장

1. 문제제기

- 최근 동아시아 및 한반도정세의 복잡성.
- 특히 작년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남북한 정세는 경색되고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 이 글은 최근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문제의 구조적 차원을 논하고, 이와 연관해 진보진영의 평화전략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2. 동아시아 평화문제의 세 차원

(1) 중국의 성장과 미, 일의 동아시아정책: 미중일 대삼각형

1) 중국의 성장과 세력권의 재편

- 중국의 국가적 목표: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
 - >지금까지의 고도성장 기초: 보팔(保八)기조의 수정
 - >에너지, 기초자원 등 성장필요 자원의 대외적 의존의 심화
- 경제적 측면: 자원확보를 통한 전세계 의존의 강화
 - >에너지보유국가의 자원 '매수전략' : 러시아, 중앙아시아
 -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주변 유연(soft자원) 안정화: FTA, 다양한 경제진출
- 군사적측면: 세계 제2위의 군비지출국가-->전략적 개념의 군비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군 영향권 확대노력

- >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호적 영향력과 해로(sea lane)
- > 인도양 등에서의 전략적 영향력
- > 우주항공 등 신 전략적 군사분야의 진출박차
- > 경제영역확대와 결합한 글로벌 안보전략: SCO의 경우

2) '위협' (threat)으로서 중국

- 중국의 성장은 동아시아지역(경제)질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질서를 크게 변화
 - > 중국의 '소강'은 그에 걸맞는 세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
 - > 세계적 자원경쟁
 - > 동아시아지역내의 영향력경쟁: 동남아시아, 대만해협/동남중국해, 한반도 등 '완충지역' 등에서 종래 soft/hard 면의 영향력이 크게 변화: 중국의 영향력
 - > 2가지의 패권적, 지정학적 문제발생
 - a)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능력과 힘의 상대적 약화
 - b) 일본과 현실적 생존권역(生存圈域) 갈등이 발생
 - > 냉전시기와 같은 완벽한 의미의 '봉쇄'는 불가능
 - a) 경제적 상호의존
 - b) 중국의 현실적 힘과 영향력
- 중국의 성장을 둘러싼 견제와 포위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발생
 - a) 중국을 포위하는 협력망: 미국의 '불안정의 호', 일본의 '자유번영의 호' (가치관외교/중국포위FTA망)
 - b) 중국과의 실질적인 경쟁의 강화: 자원외교,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경쟁
 - c) 중요한 것은 군사적 함의. 중국의 해양군사력 증대에 대한 초점. 미국과 일본의 중요한 군사적 위협 상황인식. (부시-자민당정권의 견제전략, 오바마-민주당정권의 QDR, 일본방위대강)
- 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소위 'G2시대'론, Chinamerica론으로 나타남. 중국의 '패권진입' 혹은 '미국패권잠식'?
 - > 현상에 대한 강조로부터 나타나는 '현실주의'적 강조이거나 '저널리즘'적 용어법일 수 있음. cf) 1980년대 미일관계.
 - >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전략을 취할 것인가? 안정적 성장의 담보, 그리고 미국 위협인식의 증가, 전략적 군사능력을 보유한 자립적 대국 지향성은 존재할 것
 - > 과연 중국이 하나의 독립적 패권국으로 성장 가능한가? 대외적 조건, 대내적 조건

3) ‘위험’ (risk)으로서 중국의 성장

-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여부 문제

-->지금까지는 잘 관리되어 옴.

-->그러나 대외의존경제, 토목건설 국가적 인프라의존 경제성장의 후유증

-->후진타오 이후 정권승계와 민주화 문제: 민주주의를 우회하는 ‘위로부터의 신(新)프러시아형 모델의 새로운 실험’ 이 성공?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문제의 연결과 새로운 발전경로?

-->새로운 경제-시민사회주체와 관료적 독재(혹은 선취적 코포라티즘?)

-->문제점의 중첩과 집약, 폭발?

- 동아시아의 문제와 전세계적 문제로서 중국위험

4) ‘기회’ (opportunity)로서 중국

5) 중국과 미일동맹: 2000년대 중국의 구조적 성장

- 미국: 관여와 헤징(engagement with hedging), 보수파일수록, 그리고 최근 민주당조차 헤징이 강화

- 일본: 동아시아에서 직접적으로 생존권역의 공유. 갈등요인의 강화, 자민당의 반중국 전략, 민주당 대중국정책의 선회

- 대중국 미일견제동맹: 패권 프레임-미국; 구체적인 견제의 동력-일본

-->중국견제/봉인의 제도적 인프라로서 ‘미일동맹’

| 연대 | 50 | 60 | 70 | 80 | 90 | 2000 | 2010 |
|----|--------|----|-----------|--------------|------|----------|----------|
| 미국 | 대중봉쇄 | | 대소봉쇄/대중관여 | | 대중관여 | 대중견제(보수) | 대중견제(민주) |
| 일본 | 봉쇄 | 협력 | 대중협력 | 대소봉쇄 대중관여 | 대중관여 | 대중견제(보수) | 대중견제(민주) |
| 중국 | 사회주의초기 | | 사회주의 | 개혁개방 | | 고도성장 | |

(2) 북핵문제와 동아시아

- 북한의 생존전략과 핵개발, 핵을 중심으로 하는 벼랑끝전술(brinkmanship)
 - >북한의 경제위기와 잠재적 정치위기의 상존(常存)
 - >양위기의 악순환 가능성
- 핵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일 보수세력의 강경전략
 - >북의 위협제거: 미국의 비확산전략(패권전략의 일환), 일본의 반북전략(보수정권전략/납치문제)
 - >중국의 입지약화: 한반도에서 대중국 경쟁 강화-->6자회담에서의 경쟁과 대립/협력
-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양면적 입장
 - >한반도 정치적 영향력의 근거로서 북한
 - >정치적 영향력 축소계기로서 북한핵문제
 - >후견과 압박, 실질적 영향력(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제적 수단

(3)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 대 북중(러) 냉전적 공세동맹

- 미일-중간의 신냉전적 대립구도; 북핵문제 속에서 한국의 미일동맹에의 견인(entrapment)
- 남한 보수정권의 신냉전주의 시야/정책: 반북정책과 그로 인한 독자적 대중정책의 포기
- 신냉전적 한미일 '동맹화'
 - >미일동맹의 새로운 전개: 2 + 2, 미군의 기동적 재편, 미일동맹의 변혁, MD 진전
 - >한미동맹의 재편성: 미군의 광역 기동 재편
 - >한일군사협력: 군수지원협정, 군사정보협정 --준군사 '동맹'
 - >천안함, 연평도 이후의 3국 군사훈련의 강화: 대북 군사시위
- 한미일 군사활동의 대중국 의의
 - >서해훈련과 중국군사정보의 확보
 - >중국의 팽창적 군사력에 대한 상시적 하드웨어 인프라의 작동 가시화

- 북한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해양동맹’ 과 ‘대륙동맹’ 의 대립구도

3. 북한문제의 전개방향

(1) 북한의 생존전략

1) 위기: 시간과의 투쟁

- 경제적, 생존의 위기: 에너지, 식량, 경제자원의 문제
 - >생활의 재생산 문제
- 정치, 군사적 봉쇄와 포위, 붕괴전략
 -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핵문제’
- 위기=시간과의 투쟁이라는 딜레마
 - >핵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brinkmanship 강화
 - >정치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위기전술’

2) 위기와 위협전술

- 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위협전술
- 위협의 두가지 측면
 - >보수세력에 대한 협상물
 - > ‘남측’ 혹은 ‘동아시아’ 대중을 ‘볼모’
 - >평화에 대한 객관적 위반, 보수세력에 의한 역공 가능성
 - >핵문제와 남측과의 국지전-->선제공격이거나 대상이 대중을 향하는 순간,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일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군사적 위협으로 전환(연평도문제)

(2) 한반도 평화과정과 통일에 있어서 북한체제

1) 역사적으로 진화하는 북한체제의 의미

- 북한체제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보진영이 터부시할 필요는 없음.
- 원칙적으로 국제진보운동의 역사 속에서 ‘현존사회주의’ 문제의 객관화는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였음. 그러나 이러한 객관화에 실패한 결과 국제진보운동도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와 스스로를 구별정립하지 못하고 위기에 빠진 측면이 있음.
- 진보운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운동공간에 기반을 둔 자주성과 국제주의적/진보주의적 연대의 태도, 그리고 나아가 현상에 대한 비판적(성찰적, 과학적) 전략임.
- 국제운동사를 돌이켜 보건대, 현존 사회주의의 가장 큰 위력은 진보운동에 대한 ‘모범’ (example)으로서의 역할에서 발생할 것임. 이 ‘모범’ 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국제적 위상만을 강조한다면 ‘현존 사회주의’ 는 스탈린적 ‘기지론’ 의 모순에 빠질 수 있음. 즉 현존사회주의의 ‘모범’ 은 없는데, 여러 가지 왜곡요인을 감내하고 진보운동이 이를 맹목적으로 ‘보호’ 하기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 과거 역사 속의 ‘북한’ 이 아니라, 우리 진보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북한체제’ 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재검토해야 함. ‘모범’ 일 수 있는지, 과거의 환상은 없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비전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적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 진보운동의 관점과 입장에서 냉철하게 재검토해야 할 때임.
- 진보운동세력이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적 자세로 극복하려고 하듯이, 현존 사회주의의 체제적 한계와 문제--국가사회주의 혹은 세습 등--를 건강하게 극복, 지양하려는 객관적이고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함. -->한국사회진보의 새로운 재구성을 위해서도 이는 전제가 되어야 함.

2) 이론과 정치의 딜레마

- 진보는 이론적 입장에서 자주성을 갖고, 남북모두의 현존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진보사회의 상을 과학적으로 그려갈 수 있어야 함.
- 그리고 남북한 갈등과 북한의 위협전술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일반민주주의적 관점 하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음. 이는 당연한 남한 민중과 진보운동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함.
 - >북한 핵문제와 선제적 대남공세 혹은 불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북한 핵을 용인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존문제로 발생하는 북한의 ‘위협전략’에 대해 한국의 진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한편 북한문제는 이론적이고 일반민주적 실천의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측면도 있음.

-->북한당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의 상대: 한반도의 공동운명을 개척해야 할 주체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재배치하려는 공동의 방향과 전략

-->한반도의 장기적 통합을 위한 정치적 기반 강화

- 새로운 진보의 이론적 가치/강령적 입장과 남북한 정책(정치)간의 차원 혼동은 피해야 함

-->진보의 이론문제, 일반민주주의의 근본적 부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주성

-->정치(1): 한반도 평화정세, 평화적, 건설적 통합을 향한 다양한 정치적 협력방안을 모색 -- 남북평화체제, 북한의 안전보장

-->정치(2): 한국 정치세력과 북한이 전향적, 건설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설득능력

-->정치(3): 북한 민중의 생활위기 극복과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력

(3) 향후 북한문제의 전개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통일방안론?

- 한국에는 추상적인 통일방안론만 존재함. 이는 진보운동에게도 마찬가지임.

-->연합론과 연방론.

-->그러나 무엇이 바람직한 통일/통합인지? 어떠한 경로로 통일/통합이 실현되어야 하는지? ‘통합/통일전략’은 사실상 부재.

- 통일방안론은 추상적이며 상황개입능력을 갖고 있지 못함.

- 그간 진보세력이 통일문제에 대한 상상을 구체적으로 못해왔기 때문이기도 함.

2) 국제적 보수세력의 작전

- 키 리졸브와 ‘개념계획 5029’ 문제

- 최근 한미합동군사작전의 전제

- 물론 국제적 보수동맹의 의도대로 모든 환경이 전개될 것으로 볼 수는 없음

3) 통일문제를 이제 막연하고 추상적인 미래사로 간주하기 어려울지 모름.

- 바람직한 통일의 경우는 진보적 비전과 큰 모순은 없을 것

- 그러나 언제나 바람직한 통일환경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

주체적으로 계산되고 통제되지 못한 상황은 진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게는 엄청난 ‘재앙’ 이 될 수 있음.

-->진보의 통일/통합시나리오와 전략은 무엇인가? 그에 따르는 평화와 통일(통합)정치를 구사할 필요. 이를 위해서는 진보적 통일/통합전략논의의 구체적 전개 필요성.

-->예상 밖의 상황전개에 대한 진보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4. 진보적 평화전략의 방향: 단기, 중기, 장기

(1) 평화의 기준

1) 당면한 평화: 일반민주주의로서의 평화옹호

2) 건설적 평화: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한반도 통합의 전제조건

3) 심화되는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 공동발전을 위한 한반도의 국제적 역할

(2) 단기: 일반민주주의로서 평화의 옹호

1) 남북의 직접적 대립정책의 포기; 북한위협 의 약화/포기

2)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북한위기의 극복과 안전확보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지대화(-->동아시아평화의 ‘발신지’로서 한반도)

4)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부흥

5) 남북재해협력, 동아시아 원자력에너지(통제) 협력

(3) 중기: 한반도 통합을 위한 올바른 비전의 정립

1) 한반도 통일/통합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 통일/통합의 구체적 방안, 접근방법, 정책론을 결합한 전략적 접근
- 상황의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검토의 요구

- 북한당국과의 협상, 정치적 협력, 공통정책-제도형성 가능성 탐색
- >through 기존정부
- >through 독자집권

2) 진보 집권, 평화조건에서 남북한의 수렴적 통합조건 확보

- 한국의 사회연대국가 지향성 강화
- 북한의 경제체제 재구축, 남북한 진보적 경제연대의 기반강화
- 북한사회의 점진적 민주화와 인권개선
- 기본적인 통합지향성 위에서 ‘연합’ 론과 ‘연방’ 론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3) 통합지향의 강화를 위한 동아시아의 국제적 조건

- 한반도 핵문제 해결, 평화문제 도입의 기본적 국제제도로서 ‘6자회담’
- 북한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통합조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제도로서 ‘육자회담’

- 주한미군의 대북공세성 이완과 단순한 정치적 안정자(stabilizer)로서의 역할 전환
- 한미일 남방동맹의 ‘해체’ : 한일 군사조약의 해체, 한미동맹의 재검토

(4) 중장기: 동아시아의 건설적 통합과 비전을 위한 한반도의 비전

1) 중국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미일의 중국’ 과 ‘한국의 중국’ 이 동일할 수는 없음.
 - >위협/위협/기회 대 기회/위협/위협 (우선순위의 차이)
 - >전략 또한 ‘한미일동맹론’ 이 아니라 선별적인 접근일 수밖에 없음
 - >그러면 반미/친중전략이어야 하는가? 그러나 중국전략에서 잠재적인 위협과 중장기적 위협의 가능성을 ‘헛지’ 할 필요는 있음. 따라서 ‘중단기’ 적으로 혹은 ‘중기적’ 으로 미일과의 친화력 있는 관계유지는 대중전략상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일관되고 지속성있는 동아시아전략설계와 정치능력이 중요함.

2) 미래 한반도는 진보적인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을 위해 비전과 지혜 발신자 역할을 해야 함.

- 지혜국가(wisdom state)의 비전: 한국의 진보적 국가비전은 지식, 문화국가로서 동아시아에 ‘평화, 협력, 공동발전을 위한 지혜’ 를 발신하는 것.
- 이를 위해서 경제, 문화, 지식면에서는 ‘강국’ 을 추구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소국’ 을 지향하는 ‘소한국주의’ 로 나아갈 필요. ‘작아도 지혜로운 국가’
-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는 ‘중립화’ 의 길을 걸을 것이 필요함. (+ 미군철수)
 - >중립국
 -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3) 동아시아공동체의 협력강화

- 중국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구도
-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최근의 협력/경쟁 경향
 -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

- 동아시아, 세계의 ‘위협’ 이자 ‘위협’ 인 중국문제의 공동체 내재화 필요성
 - >에너지등 자원안정공급협력
 - >중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 및 거시정책협력

- 지역의 공동발전과 발전
 - >일본의 대지진 극복
 - >원자력안전
 - >기후변화 등 자연 대재앙 극복노력

한반도의 평화

|| 조덕휘 반빈곤빈민연대 공동대표

한반도 봄 위기는 진행중이다

보수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9년 천안함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한 남북희생자발생 등 남북관계는 계속된 긴장과 군사적 대결이 진행중이다. 북한 또한 이명박정부에 대해 전쟁불사발언, 핵실험등추진등으로 강경분위기로 맞대응하고 있다. 남북간 대결상태는 이명박정부하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군사문제 전문 기관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의 위기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 심각한 위험상태라는 분석을 내어놓았다. 타 국가의 시각에서도 남북관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기말을 향해 가는 이명박 정부는 선거시기 보수층 표를 위해 현재의 정책을 바꾸기 보단 지난 3년간 북한에 대한 대응기조를 유지해 국방안보정국을 조성하고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지속해 갈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의 계속된 위기가 더 큰 군사충돌로 치닫지 않을까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송시사토론의 주제 또한 한반도 봄위기 설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초 연인원 20만 명의 군인이 동원된 한미연합 키줄브 훈련이 시작되었다.

한반도의 봄, 군사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남북관계의 가변성을 바꾸어야

이명박정부가 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10년 동안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최초로 남북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였다. 2000년 남북간 정상회담 6.15남북공동선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10.4 선언으로 남북관계는 대결보다 평화가 더 큰 이익이며 효율성 높은 것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3년 만에 10년간의 남북관계는 반전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의 위기는 전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는 10년간 남북화해정책이 얼마나 한순간에 뒤집어 질 수 있는 허약한 토대인가를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해법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남북관계는 일정수준 평화안정과 화해기조로 바꾸었지만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관계의 성과가 정치적 거래로 공격당하기도 했고 임기말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사고되기도 했다. 남북관계는 전략적 사고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홍보수단도 아니며 한반도의 안정과 운명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남북관계개선은 상호신뢰의 회복,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가 동반되어야 하며 복잡한 미중일러 등 국제관계의 대결속에서 남북이 국제관계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있고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일회일비식 이해관계적 접근이 아닌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 군사적 대치와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양체제가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근본 전략으로 사고해야 한다. 불안한 남북관계의 대가는 결국 언제든 우리 생존의 기본 전제인 평화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고 위험성을 해소하는 데는 전략적으로 실패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 하고 보수정부하에 그 기조가 180도 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남북관계는 일관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군사적 대결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과 신뢰구축이 있어야 하며 미국과 중국고려보다 남북의 이해와 이익을 우선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남북대결을 멈추고 평화체제 구축에 다시 나서야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겪은 이후 대한민국 국방비는 6% 증액되어 3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민생과 복지는 여전히 미온하다. 남북간 화해 평화와 군사적 긴장해소는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차해결과제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는 평화복지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에 불안과 끝없는 군사적 대결대신 대화와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사고하고 풀어가야 한다.

남북간의 대화를 복원하며 북한이 겪는 경제적 위기를 인도적으로 지원하는데서 그 전

락을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상호신뢰없이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전대 10년간 남북평화협력정책을 추구했던 정부를 뽑았다.

다음의 정부는 항구적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

